

3842
349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III. 本 報告書는 美國大統領選舉 (80. 11. 4) 이전에 美·日의 對韓半島 政策을 展望하여 變化에 對應키 위한 資料 提供의 目的 으로서 委囑된 特殊課題 研究結果임.

美·日新政權出發後의 對韓半島 政策展望

--A Prospective Study on Policies of New
Governments of the U. S. and Japan--

研究執筆責任 鄭 鎔 碩

東亞日報社 論說委員

刊行責任 金 容 在 (政策企劃室 補佐官)

이일양에게
미국에 대한 연구
일본에 대한 연구
한반도 주변국에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要 約

英文要約

第一部 「카터」新政府	1
1. 予測不許의 選挙	1
2. 「카터」의 对韓軍事政策	5
3. 「카터」의 对韓人權政策	14
4. 「카터」의 对北韓政策	25
第二部 「리건」新政府	31
1. 「리건」의 对韓軍事政策	31
2. 「리건」의 对韓人權政策	35
3. 「리건」의 对北韓政策	40
第三部 日本新政府	45
1. 「스즈키」의 穩健保守	45
2. 「스즈키」의 对韓政策	49
3. 「스즈키」의 对北韓政策	55
第四部 対応策	62
1. 「카터」의 对韓軍事政策	62
가. 問題提起	62
나. 対応策	62
2. 「카터」의 对韓人權政策	63

가. 問題提起	63
나. 対応策	63
3. 「카터」의 对北韓政策	65
가. 問題提起	65
나. 対応策	65
4. 「리건」의 对韓軍事政策	67
가. 問題提起	67
나. 対応策	67
5. 「리건」의 对韓人權政策	68
가. 問題提起	68
나. 対応策	68
6. 「리건」의 对北韓政策	69
가. 問題提起	69
나. 対応策	69
7. 「스즈키」의 对韓政策	70
가. 問題提起	70
나. 対応策	70
8. 「스즈키」의 对北韓政策	71
가. 問題提起	71
나. 対応策	71

要 約

1. 「카터」의 對韓軍事政策

「카터」대통령은 美國內 保守思潮와 周邊情勢의 緊張高潮로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을 계속 凍結시켜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카터」는 그의 重任期間 안으로 周邊情勢가 許諾하는한 選舉公約대로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단행하려 시도할 것이다. 더우기 美國內 保守思潮 속에는 海外介入 축소를 요구하는 무드가 뿌리깊다고 할때 「카터」대통령은 그같은 기류에 편승하기 위해서도 駐韓美地上軍의 철수계획을 계속 엿볼것이다. 다만 周邊情勢의 變化와 關聯없이 「카터」대통령은 駐韓美空軍力을 보강할 것이며 對韓軍備販賣를 지원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서도 北韓이 單獨으로 全面南侵을 자행할 때 「카터」행정부는 駐韓美地上軍을 自動投入하겠지만, 戰爭이 長期化한다면 또 다른 越南戰化를 우려한 나머지 地上軍을 빼고 軍裝備支援만으로 後退하며, 韓國에서 內亂이 발생한다고 할때에도 「카터」행정부는 駐韓美軍介入을 단행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카터」의 對韓人權政策

「카터」대통령의 전반적인 人權政策은 初期에는 威壓적이었으나, 곧 弱化되어 間接적인 接近으로 後退하였다. 「이란」과 「니카라

과]의 親美政策이 人權向上政策을 쫓다가 전복되고 그위에 反美政
權이 들어서게 되자. 「카터」행정부는 크게 衝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카터」는 友邦의 人權 보다는 安保를 重
視하는 冷戰體制下的 美國政策으로 거의 後退하다시피 하였다. 그
러나 「이란」과 「니카라과」의 衝激이 가시고 蘇聯의 「아프간」
侵攻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카터」행정부는 또 다시 人權問題를
間接的이나 韓國을 비롯한 友邦에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人權에
대한 美國의 관심은 獨立精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직도 人
權改善을 촉구하는 美國의 소리는 도처에서 드높기 때문이다. 人
權問題를 韓國政府에 強力히 제기하고 나설때 韓國의 반발을 우려
한 나머지 「카터」행정부는 고압적인 수단은 피하고 점진적인 改
善을 촉구하는 것으로 머무르리라 분석된다. 그러나 韓國의 人權
狀態가 惡化될 때 美國의 여론은 크게 반발하여 「카터」행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카터」의 對北韓政策

「카터」행정부는 北韓의 對南好戰行爲를 경계하면서도 北韓에
대한 非政治的인 차원의 交流를 점차 증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經濟的인 측면에서 「카터」행정부는 현재 日 北韓 형태의 經濟交
流 水準까지 美國과 北韓의 經濟交流를 추진할것 같다. 따라서
「카터」대통령은 그의 重任期間內 對北韓 禁輸措置를 해제하리라
판측된다. 그러나 美國의 전반적인 政治思潮가 당분간은 保守化할

것이므로 「카터」행정부의 對北韓 接近活性化는 크게 견제를 받으면서도 美 中共 관계개선에 따라 美 北韓關係도 接近될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다.

4. 「리진」의 對韓軍事政策

「리진」대통령은 「카터」와는 달리 選挙公約으로 駐韓美軍의 존속을 내걸었으므로 美軍을 빼야할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 北韓에 대한 警戒態勢도 2차대전 이후 美国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렇다고 「리진」이 北侵을 도모하지는 결코 않는다. 美国에서 일고 있는 保守思潮에는 對共 경각심을 높이 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한편으로는 海外介入을 반대하고 傳統的 孤立을 회구하는 강한 潮流가 흐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리진」도 「카터」와 마찬가지로 海外軍事介入을 원치는 않는다. 특히 次期 議會도 계속적으로 民主党에 의해 지배될것을 예상할 때 70년부터 굳건히 海外軍事介入을 반대해온 인색한 議會는 「리진」의 손을 묶어 놓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北韓이 单独으로 對南軍事行動을 자행한다 해도, 「리진」은 宣戰布告없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戰爭遂行權을 활용, 韓國을 지원하겠으나, 그후부터는 議會에 묶여 美地上軍의 介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予測된다.

5. 「리건」의 對韓人權政策

「리건」대통령은 후보로서 유세를 할때 「카터」의 人權政策이 友邦同盟國들을 괴롭혀 왔다고 지적하였고.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韓國을 방문하여 韓國政府와의 友好關係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한 점을 상기할때 「리건」은 韓國에 人權問題를 提起할것 같지 않다. 道德 보다는 『힘의 優位』를 基本哲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리건」임을 감안하면 그의 外交政策에서 人權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리라 관측된다. 거기에다 人權意識을 고취시켰던 進歩思潮가 크게 退嬰하고 實利를 강조하는 保守思潮가 풍미하고 있으므로 人權의 位置는 더욱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美國의 精神속에는 아직까지도 獨立戰爭 당시부터 美國의 思想을 지배해온 自由民主意識이 생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진대, 美國內에 일었던 人權의 關心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共和黨보다 進歩性이 드높은 民主黨이 계속 議會를 지배한다고 할 때 여론과 의회에 의한 人權提起는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리건」행정부하의 人權問題는 마치 「닉슨」이나 「포드」행정부때 처럼, 행정부는 友邦의 人權을 감싸고 도는데 반해 議會와 여론은 신랄하게 友邦의 人權을 비판하는 二重構造의 人權現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6. 「리건」의 對北韓政策

「리건」대통령은 北韓의 好戰的 挑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며 對北韓 警戒태세를 늦추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카터」행정부와의 對北韓政策 차이라는 것은 「리건」이 겉으로는 強硬策을 쓰는 것 같이 보일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對北韓接近을 지속시킬 것이므로 별 차이 없다. 「리건」행정부는 『힘』에 바탕한 對共協商原理를 견지하려 할 것이므로 「카터」의 「3者會談」같은데는 관심을 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 一民族 二國家 原則에 따른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과 같이 南北韓 兩體制를 既定事實化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7. 「스즈키」의 對韓政策

「스즈키」內閣은 日本의 反韓輿論에 밀려 韓國에 냉담한 態度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日本內에서 일고 있는 保守思潮와 國際的 緊張感增大등의 힘으로 그같은 냉담한 態度를 「스즈키」政府는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韓國에서 새 憲法에 따라 合憲的 大統領이 등장하게 되면 韓國에 대한 體制問題는 더욱 弱化되리라 예측된다. 문제는 金大中 事件이다. 金大中 事件은 어떠한 政治思潮나 맹목적인 日本의 反韓우드 때문이 아니라, 國際法上 걸리는 問題이므로 日本政府는 이 사건에 관해

계속 물고 늘어질 밖에 없다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韓日關係의 展望은 金大中 事件에 대한 處理問題에 크게 左右된다 하겠다.

8. 「스즈키」의 對北韓政策

韓國을 견제하기 위한 外交지렛대, 商品販賣開拓의 일환으로 인한 市場 接近의 必要性, 美國의 對北韓 接近活性化에 뒤지고 싶지 않은 日本의 競争的 殲滅심리 등으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接近은 앞으로 活性化 하리라 관측된다. 그러나 韓國側의 반대, 「스즈키」의 穩健路線, 日本內의 保守思潮 등으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接近은 韓國의 國際的 孤立을 초래할 정도로 近接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韓日關係가 交易 또는 其他政治問題로 惡化된다든지 美北韓關係가 크게 好轉되어 日本內 親北韓勢力의 得勢를 물고 온다면 日北韓關係는 韓國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정도로 크게 개선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和의 政治』를 motto로 내세운 「스즈키」의 『和』의 政治哲學下에서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 Prospective Study on Policies of New
Governments of The U.S. and Japan

Yong Suk Jung

Editorial Writer, The Dong-A Libo

Carter's Military Policy in south Korea

President Carter seems to be forced to keep his postponement of military withdrawal plan from south Korea under the stress of increasing ten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of a conservative trend in American mind. Carter, however, would like to withdraw American ground troops from Korea in his second term as he promised in 1976 campaign as far as circumstances permitted to do so. Moreover, Carter's desire to withdraw American troops could be natural for Carter to follow general tendency of non-intervention in foreign affairs which evolves out of American conservatism. In the meanwhile, Carter would strengthen the U.S. air forces in Korea and increase weaponry sales to south Korea regardless changing situa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invasion without support of its allies, the Carter administration would throw automatically

American ground troops stationed in Korea into the battlefield. If the war, however, protracted, the administration should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battlefield and only render logistic supplies. Neither American ground troops could be mobilized when there errupted internal disturbances in south Korea.

Carter's Human Right in South Korea

Initially Carter's human right policy had been high-handed, but confronting registance from countries which were criticized on the matter of human right, Carter has changed his high-handed attitude to moderate and indirect approach. The Carter administration was shocked by the collapse of pro-American regimes in Iran and Nicaragua which were following human rights as requested by the American government. As a result, newly emerged governments, Iran and Nicaragua are turned to be anti-American.

Seeing such collapse of pro-American governments, the Carter administration realized that the priority of American foreign policy should be rather returned to national security oriented which was a remnant of Cold War game. But the Carter administration is certain to be to raise human right on Korea and its allies if the impact caused by downfall of pro-American governments in Iran and Nicaragua were calmed. The reason why

human right policy is to be revisited is based on the facts that American interest in human rights was rooted in the spirit of American Independence and is still alive in every corner of American lives.

The Carter administration's human right policy in Korea will be, however, moderate and indirectly sought avoiding direct conflict with Korean Government. Whe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worsened public opinion would force Carter to take issue human right problems with Korean government.

Carter's North Korean Policy

The Carter administration seems to increase non-political exchange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it might be very much cautious about north Korean bellicosity. Carter is very likely to enhance econom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refore, Carter would like to lift trade ban imposed upon north Korea. The Carter administration would keep moving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the political trend of American conservatism might restrain its approach toward north.

Reagan's Military Policy in south Korea

President Reagan is not obliged to pull out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as Carter was due to his presidential campaign in which he did promise not to withdraw troops. His precaution on north Korea will be the most severe one since the Korean War broken out. This does not mean President Reagan would invade north Korea. As Mr. Carter tried to do so, President Reagan would not intervene in foreign countries militarily.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next Congress will be dominated by the Democrats who have insisted on non-intervention since the 1970's, Reagan's hands would be tied by those Democrats. In case of north Korean attack, Reagan would do his best to defend south Korea with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Korea, but he could not mobilize more American ground troops from other places to Korea.

Reagan's Human Right Policy in south Korea

President Reagan criticized Carter's human right policy saying that the policy caused anxiety to American allies. Considering his attitude toward Carter's human right policy Reagan would not be interested as much as Carter was in human right in south Korea. Mr. Reagan's policy having stressed rather on "power supremacy" than morality, is certain to be least interested in human right. In addition to that, the

conservative trend in American mind which emphasizes on national interest, might drive President Reagan to seek more concrete national interest than ideological one in foreign affairs.

However, it is true that American interest in human right has been quite there since its independence. And it will be also true that this coming Congress will be occupied with the Democrats who have been alert on human right probl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Mr. Reagan could not totally ignore human right in foreign policy. It is quite possible to see double standards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 which the Reagan administration is not to care much about its allies' human rights and on the other hand the Congress care much about human rights as executive branch and the Congress went different way during the Nixon and Ford administrations.

Reagan's Policy in North Korea

President Reagan will meet squarely north Korean military challenge and will not relax his caution on it, but at the same time he will seek improved relations cautiously with north Korea. Substantially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between Reagan and Carter's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both are in the same

direction pursuing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Suzuki's Policy in South Korea

Suzuki administration is driven to be antipathy to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verwhelmed by the anti-Korean feeling of the Japanese. It is, however, presumed that such disgruntled feeling will be in near future overcome with help of increasing ten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nservative Trend in Japan.

Especially, if legitimate president in Korea were to be elected in due constitutional process, the Japanese criticism regarding political system in Korea will lose its base. But main problem facing two countries is concerned with Kim Dae Jung inc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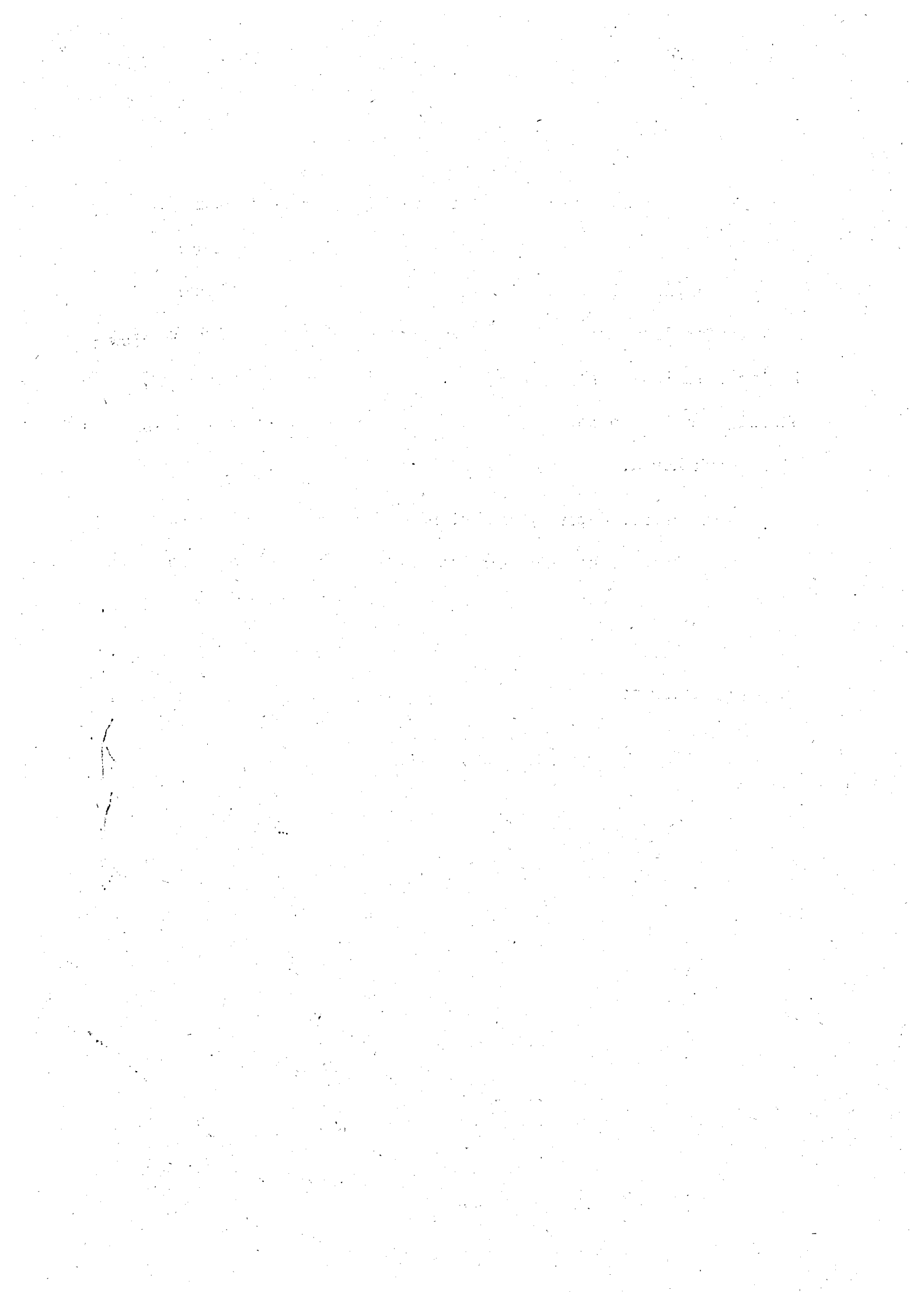
Since the Kim's matter was caused not because of political conflict between Japan and Korea but because of breach of international law complicated with Kim's Kidnapping in Tokyo,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easily disregard the matter at its discretion.

Suzuki's Policy in North Korea

Suzuki's intention to improve Japane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uld be understood looking into these factors as Japanese strategy to use its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diplomatic leverage against south Korea, to obtain markets for Japanese goods, and Japanese competition with America 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nsidering these aspects, Suzuki seem to continuously seek to improve Japane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Furthermore, Japanese relations could be more enhanced to the extent that might endanger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Korea if Korea-Japanese relations worsened by political conflicts. But such worst situation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of Suzuki's moderate political philosophy.



第一部 「카터」新政府

1. 豫測不許의 選舉

1980년 美國의 대통령선거는 「지미 카터」 「로널드 리건」 「존 앤더슨」 三派戰으로 확정되었다. 이 셋중 한 사람이 次期 美國大統領으로 당선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카터」 「리건」 「앤더슨」중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共和党 소속 「일리노이」州 出身 下員議員으로서 党的 大統領 公천을 받기 위해 予備選舉에 뛰어 들었다가 「리건」에게 밀린 나머지 無所屬으로 출마한 「앤더슨」이 낙선될 것은 분명하다.

美國歷史上 共和党과 民主党을 이탈한 후보가 당선된 先例가 없다는데서 그렇다. 1912年 民主, 共和 兩党에서 벗어나 第3党 후보로 출마했던 「테오도 루즈벨트」의 경우를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루즈벨트」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제26대 대통령이었다. 당시 共和党所屬이었던 「루즈벨트」는 자신이 후계로 삼았던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자신의 進歩路線을 갈아 뗀고 保守路線으로 帰依하자 거기에 불만을 품고 「태프트」에 대항하여 第3党을 創設하여 맞섰던 것이다.

「테오도 루즈벨트」대통령은 「워싱턴」 「제퍼슨」 「잭슨」 「링컨」 「월슨」 「프랭크린 루즈벨트」등 後世에 英明한 대통령으로

끔히리만치 당시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2년의 대통령 선거에 共和党内 후보지명에서 失敗하고 第3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

그밖에도 当代의 政界를 주름잡고 있었던 기라성같은 政治人들이 제3의 후보로 나왔다가 고배를 모두 마시었다. 1796년의 「아론 버」, 1824년의 「헨리 클레이」, 1836년의 「다니엘 스터」, 1848년의 「마틴 반 뷰렌」, 1924년의 「로버트 라포레테」, 1968년의 「조지 월레스」등이 그에 속한다.

美国歴史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같은 인물들과 1980년의 제3 후보로 등장한 「존 앤더슨」을 비교하면 「앤더슨」은 뜻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80년 7월 14일 AP通信과 NBC뉴스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리전」 42%, 「카터」 27%, 「앤더슨」 18% 2)로서 「앤더슨」이 유권자들에 의해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멀다.

그렇다면 80년 선거는 나머지 두 후보로 競争이 压缩될 수 밖에 없다. 「카터」와 「리전」 둘중의 하나가 次期 大統領이 될것이다. 이 두사람중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

오동안 실시되어온 美国内 여론조사를 보아도 예측을 不許케 한다. 80년 7월 실시한 AP通信과 NBC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리전」후보가 「카터」대통령을 42대 27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후인 9월중순에 실시된 「뉴욕 타임즈」와 CBS放送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리

진」과 「카터」의 차이는 불과 38 대 35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³⁾
「카터」가 두달만에 크게 인기를 만회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와 같은 「카터」의 인기만회가 선거일 날인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면 「카터」가 「리건」을 누르고 逆轉勝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카터」가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인기하락을 뒤엎고 再選될 可能性은 그밖에도 많다. 우선 「카터」는 現職 大統領으로서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대통령이라는 職分때문에 수시로 接할 수 있는 매스컴, 임의로 자신의 業績을 홍보할 수 있는 行政 組織動員力, 初任 大統領에게 重任의 기회를 주어 初任때 쌓은 경력을 發揮토록 하기를 좋아하는 美国 有權者들의 성향등이 그 유리한 立場이다.

그렇다고 「카터」現職 大統領이 次期 大統領으로 당선될 확율이 「리건」보다 높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리건」후보는 그 나름대로 당선될 可能性을 갖고는 있다. 「리건」후보는 오늘날 美国을 휩쓸고 있는 保守思潮를 등에 업고 있다. 穩健路線을 취해 왔던 「카터」에게는 不利한 社会潮流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예도 「카터」는 지난 在任期間 失政도 적지 않았다. 「카터」의 失政은 「리건」의 當選率을 提高해 주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1월 4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리라고 確言하기는 어렵다. 1948년의 대통령선거를 例로 들기로 한다. 당시 「해리 트루만」대통령은 3년전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의 死去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이었다.

48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비롯 대부분의 美國 여론들은 「트루만」과 「존 듀이」와의 決選에서 「듀이」 共和党後補가 앞서는 것으로 관측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심지어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紙는 總選이 끝나자 즉각 『「듀이」, 「트루만」을 격파하다』라는 前面表題를 붙여 「듀이」의 승리를 確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開票結果 모든 豫상을 뒤엎고 「트루만」이 당선되었다. 당선이 確定되자 「트루만」은 당선소감을 밝힐 자리에서 자신의 낙선을 성급하게 誤報한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紙를 양손으로 높이 펼쳐 들어 보이면서 「트리뷴」紙가 틀렸음을 조크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트루만」과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의 寸劇은 대통령당선을 豫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실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카터」와 「리건」 두 후보중 어느쪽이 당선되리라는 豫언적 분석은 피하기로 했다. 다만 「카터」후보와 「리건」후보의 政治路線을 분석하고 그들을 둘러 싸고 있는 美國의 国家的 背景을 해부함으로써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당선된 후보의 對韓政策을 導出해 낼수 있도록 한다.

당선된 후보의 對韓政策을 展望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터」와 「리건」 두 후보의 對韓觀부터 분석해야 한다. 먼저 「카터」대통령이 당선된 뒤 韓半島에 적용할 政策에 관해 展望하기로 한다.

2. 「카터」의 對韓軍事政策

「카터」대통령이 再選될 경우 그의 對韓軍事政策은 初任期的 것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初任期間 「카터」의 對韓軍事政策은 2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단계는 駐韓美地上軍의 철수정책이다. 76년 選舉期間中 「카터」 民主党 大統領 후보는 選舉公約의 일부로서 駐韓美軍의 4, 5년내 철수와 韓國에 배치된 核武器의 철거를 다짐했었다. 戰術空軍 및 海軍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카터」대통령은 選舉戰 후반에 들어와서는 駐韓美軍撤収를 條件附로 後退시켰다. 駐韓美軍撤収는 韓國安保를 蘇聯이 묵시적으로나마 보장할 때에만 강행될 것이며 友邦의 安保가 위협받게될 경우 核武器 사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⁴⁾

77년 1월, 제 3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카터」는 6개월만인 7월 韓美安保協議會議를 통해 駐韓美地上軍의 제 1차 철수계획을 확정지었다. 제 1 단계의 撤軍強行政策이었다. 78년내로 6천명을 철수하고 나머지는 4, 5년간에 걸쳐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撤収할 것이라고 재확인해 두었다.⁵⁾

그러나 「카터」대통령의 그같은 撤軍政策은 1년 3개월만에 수정되기 시작했다. 제 2 단계의 修正이 그것이다. 「카터」는 78년 4월 美議회가 8億달러어치에 달하는 對韓裝備移讓法案 審議를 늦추자 제 1 단계 조치로 취한 78년말까지의 6천명 철수를 계획대로 단행할 수 없다고 맞서기 시작했다. 6천명중 3천 4백명만

철수시키고 나머지 2천 6백명은 79년 말로 연기시켰다.⁶⁾

79년 2월에 「카터」대통령은 北韓의 兵力增強에 관한 새 정보자료를 평가할 때까지 그리고 中共과의 關係正常化 및 南北韓 對話進展등의 狀況展開에 관한 檢討가 完了될 때까지 더이상 駐韓 美軍의 감축을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⁷⁾ 이어 그는 79년 7월 20일 駐韓美軍은 81년까지 現水準서 凍結한다고 발표하였다.⁸⁾

6월말 7월초에 걸친 그의 韓國訪問 結果로 나타난 撤軍凍結 선언이었다.

80년 3월에는 「韓美聯合野戰司令部」를 발족시켰다. 韓美聯合司令部는 駐韓美地上軍과 韓國軍의 指揮體系간에 파생하는 不合理性을 제거하고 作戰指揮權을 강화하기 위한데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聯合司令部의 출현은 도리어 駐韓美軍의 長期주둔기반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美國防省은 美下院 軍事委員와 予算小委員에 제출한 비밀청문회자료를 통해 『駐韓美 2師團』은 최소한 82년부터 86년기간 동안 현지에 주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⁹⁾

「카터」대통령의 駐韓美軍撤収計劃 變更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음을 반영한다. 韓國의 철수반대가 두려워서가 아니요, 韓國民이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다. 美國의 政治思潮가 進歩主義潮流에서 保守主義로 기울고 있었던데 연유한 것이며 國際情勢 또한 駐韓美軍撤収計劃을 凍結하지 않을수 없도록 변화되고 있었던데 기인했다.

「카터」대통령이 76년 대통령선거에서 駐韓美軍의 4, 5년내 철수를 選挙公約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당시의 美国内 政治思潮가 進歩的인 색채를 아직도 많이 함축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進歩思潮는 1960년대 중반부터 고개들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对外政策에 있어서는 美国의 越南撤収였다. 進歩主義思潮는 对外關係에 있어 美軍의 海外介入에 강렬한 拒否反應을 나타냈으며 对共有和政策을 촉구하였다.

海外軍事介入에 대한 拒否反應이 進歩思潮의 특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思潮는 76년 美国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時代的 潮流로 保守主義의 挑戰을 받으면서도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할때 「카터」후보가 그 潮流에 편승할 것은 당연했다. 進歩思潮가 요구하는 海外軍事介入縮少에 편승해서 「카터」후보는 駐韓美軍의 4, 5년내 철수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일단 選挙公約으로 駐韓美軍撤収를 내세운 이상 「카터」대통령은 撤軍計劃을 실천에 옮길 수 밖에 없었다. 77년7월 韓美安保協議會談을 통해 확정되었던 제1단계 駐韓美軍撤収計劃이 그것이다. 78년말까지 駐韓美軍 4만2천명중 6천명을 철수하고 나머지는 4, 5년간에 걸쳐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撤収하기로한 내용이다.

그러나 75년 「인도차이나」半島의 赤化衝激으로 美国内에서 고개를 들던 保守主義思潮가 급격히 拡散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두텁해지자, 「카터」대통령은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더 이상 強行

할 必要가 없음을 感知했다. 保守思潮란 적어도 對外關係에 있어 進歩思潮와는 달리 높은 對共警戒心を 수반하고 있다.

保守思潮에 밀려 對共警戒心이 高潮되고 있었다는 것은 「카터」 대통령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이 확정한 駐韓美地上軍의 撤収計劃이 北韓의 好戰性으로 보아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터득하고 있던 터에 그 철수계획을 큰 저항없이 번복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접고되어 가고 있는 對共警戒心에 편승해서 駐韓美軍 撤収計劃을 수정 또는 동결시킨다면 누구도 그같은 번복을 비판하고 나설 사람이 없으리라는 환경 때문이다.

선거기간중 時流에 영합키 위해 잘못 公約된 駐韓美軍 撤収計劃을 그동안 무르익은 保守思潮의 힘으로 탈없이 뒤집어 얹자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하에 만들어진 것이 78년 4월의 駐韓美軍 撤収計劃 수정이다. 美議회가 8億달러어치의 對韓裝備移讓法案의 審議를 늦추자 그것을 핑계로 삼아 이 法案通過가 늦어지는 한 제1단계 조치를 취한 6천명 撤収는 3천4백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2천6백명은 79년말까지 연기시켜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79년 2월 「카터」대통령은 駐韓美軍의 撤収를 아예 凍結한다고 선언하였고 5개월후인 7월에는 81년까지 凍結을 연장한다고 공포했다.

選舉公約을 깨뜨린 「카터」의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 수정에 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직 「이란」의 「팔레비」

親美政權이나 「니카라과」의 「소모사」親美政權이 反美로 넘어가기 전의 일이고, 蘇聯이 「아프가니스탄」을 侵攻하기 전에 단행된 철수계획수정이었으므로 급박한 周辺情勢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美國의 政治潮流를 질세 틀들이던 保守思潮 덕택이다.

사실 「카터」대통령은 76년 선거 당시 國防費를 50億달러 내지 70億달러 減縮하고 美國의 武器輸出量도 줄일 것이며 蘇聯과는 제 2 단계 戰略武器制限協定(SALT II)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公約한바 있었다.¹⁰⁾

그러나 4년이 지난 80년 9월현재 「카터」대통령은 國防費를 70億달러 減縮하기는 커녕 도리어 79년도 不變額로 3%나 증액했으며 武器輸出도 줄지 않고 늘어 났고 SALT II는 蘇聯의 「아프간」侵攻에 대한 항의표시로 上院에 비준을 위해 제출되어 있었던 것을 철수해 버렸다.¹¹⁾

駐韓美地上軍의 철수계획이 凍結로 굳어진 사실이나 70億달러의 國防費削減 公約이 도리어 3% 增額으로 나타난 公約의 空約化는 2가지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카터」의 軍事政策이 전반적으로 그의 任期中 保守潮流에 따라 變質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選舉公約이란 時代的 潮流에 따라 지켜질 수도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년개 아니라 共和黨 全國委員長 「빌 브로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카터」대통령은 76년의 選舉公約 6백개중 2백개 이상을 깨트렸다는 것이다.¹²⁾

「카터」가 初任기에 보인 이상과 같은 軍事政策의 保守化와 美国政治潮流의 保守化를 감안할 때 「카터」가 再執權한다 해도 對韓軍事政策은 지금과같은 保守的 原則에 준거해 가리라 보아 무방하다.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를 凍結하고 韓國에 대한 高性能 軍裝備 販賣에 인색치 않으리라 예측키 어렵지 않다.

예컨대 美国은 79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제 12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에서 韓國空軍力을 增強하기 위해 82~86년 사이에 韓國에 F16 전투기 36대를 판매하고 80년에는 A10근접지원기 1개 대대를 파견, 배치키로 合意했던데서 그같은 방향은 반영되고 있다.¹³⁾ 그밖에도 美国은 5개년(81~85) 계획으로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와 韓國 두 지역에 탄약을 包含한 戰爭予備物資를 『충족시킬 방침』이라는 데서도 확인되었다.¹⁴⁾

그러나 이와같은 「카터」대통령의 駐韓美地上軍 撤収 凍結이나 對韓軍裝備支援이 非常時 美軍의 추가 派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国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79년 9월 조사한 결과가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韓이 北의 공격을 받을 경우 韓國防衛를 위해 美国이 개입해야 한다는 反應은 불과 32%밖에 안되고 반대가 56%나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韓國防衛를 위해 美軍주둔을 더욱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9%, 현수준 유지가 49%, 감축이 16%로서 단연 현수준 유지를 절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여론조사보다 2개월전에 실시된 유명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北韓의 침공을 받을 경우 美軍의 韓國파견을 지지한 일반국민은 21%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반해 日本의 경우는 42%나 되었다.¹⁶⁾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美國에서 保守思潮가 거세게 일고있음에도 北韓이 南韓을 侵略할 경우 추가적인 美軍파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옳다.

保守主義思潮는 對共警戒心の 증대를 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對共警戒心이 증대되는 가운데 非常時 美軍의 派兵이 어렵다는 것은 論理的 矛盾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保守思潮가 對共警戒心を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孤立主義的인 性向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看過해서는 안된다. 傳統에 뿌리를 둔 保守主義는 美國伝來의 孤立主義에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海外軍事介入擴大를 거부하도록 되어있다. 더욱이 80년대의 美國保守思潮라는 것이 70년대 海外介入 敗北의 反動으로 일고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海外介入의 확대를 生糧的으로 증오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保守主義가 共產國에 대한 警戒心を 촉구하므로써 對共態勢強化를 결과하면서도 더 이상의 海外介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상할게 없다. 論理的 矛盾일지는 몰라도 원래 80년대 保守主義思潮가 안고있는 二重的인 성격인 것이다. 駐韓美軍의 현수준 유지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하면서도 非常時 美軍의 韓國파견에는 21%밖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인색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같은 保守思潮의 兩面性을 설명한다. 對共警戒態勢는 強化하되 더 이상 美軍의 海外介入 확대는 할수없다는 것이다.

保守主義의 이같은 兩面性은 「이란」과 「니카라과」 그리고 「아프

간] 사태에서 여실히 실증된바 있다. 79년 2월에는 「이란」에서 親美 「팔레비」政權이 그리고 5개월 뒤에는 中南美 「니카라과」에서 또한 親美 「소모사」政權이 붕괴되고 있었음에도 美國은 이들 親美政權 救濟를 위한 단 1명의 美軍도 投入하지 않았다.

2차大戰後 美國은 親美政權이 親共 또는 反美勢力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 서슴없이 美軍을 問題地域에 投入하였었다. 1950년대에 美國은 北韓 共產軍이 南쪽의 親美政權을 정복하려 南侵하자 즉각 美軍을 대량 投入시켰다. 60년대에는 「쿠바」가 反美 共產化하자 「베이 오브 피그」 (Bay of Pigs) 侵入을 단행하여 「쿠바」를 다시 親美로 끌어들이려 기도 한바 있으며 「도미니카」 共和國이 內政혼란으로 흔들리자 美海兵隊를 上陸시켰고 끝내 越南이 위협받자 53만 大軍을 쏘아넣기도 했다.

美國의 그와같은 왕년의 海外介入을 상기한다면 「팔레비」와 「소모사」政權의 붕괴나 蘇聯의 「아프간」 侵攻은 美國의 軍事介入을 결과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軍事적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美國에 세차게 일고있는 保守思潮에 묶인 탓이다. 對共警戒心은 強해도 反戰무드에 잡혀있고 海外介入을 거부하며 美國傳統의 孤立을 指向하는 保守思潮 그것이다.

保守思潮에 휩싸인 「카터」대통령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兩面性 즉 對共警戒心과 海外軍事介入縮小라는 상치되는 政策을 韓國에 교묘히 적용하고 있다. 對共警戒心を 충족키 위해 「카터」대통령은 北韓의 軍事力 增強을 되풀이 경고하고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凍

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海外軍事介入을 예방키 위한 조치로서 北韓과의 非政治的 접촉을 통한 緊張緩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兩面性에 바탕한 「카터」의 이같은 對韓半島政策은 마치 紀元 6세기 「이슬람」敎의 創始者 「마호메트」가 한손에는 「코란」을 다른 한손엔 칼을 들고 布敎했었던 그런 특성을 지닌다 하겠다.

나라서 「카터」가 次期 대통령으로 再選된다면 그의 對韓軍事政策은 다음과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카터」대통령은 保守思潮와 蘇聯 및 주변정세의 긴장고도로 휩싸인 나머지 駐韓美軍철수계획을 계속 凍結시켜 나갈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언제까지 凍結시킬것인가는 추측키 어렵지만 적어도 그의 再任期間의 末까지 계속될것 같지는 않다. 再選된 「카터」는 그의 重任期間 안으로 選舉公約에 따라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마무리 지으려 모색할것이 분명하다. 거기에서 保守主義思潮라는것이 海外軍事介入의 축소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카터」는 重任期間中 蘇聯과 緊張이 더이상 高潮되지 않고 國際情勢가 安定을 회복해 가면 駐韓美地上軍은 철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둘째, 「카터」대통령은 保守思潮의 兩面性인 對共警戒心 증대와 海外介入축소 무드가 共存하는 엇갈리는 時代的 潮流를 충족키 위해 駐韓美地上軍은 철수시키려 계속 기회를 노리고 또한편으로는 駐韓美空軍을 증강하고 對韓軍事販賣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美軍철수는 海外軍事介入축소 潮流를 달래주는데 기여하고 空軍增強및 對韓軍事

販売 확대는 對共警戒心 증대를 동시에 무마할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北韓이 中·蘇聯軍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全面南侵을 자행한다면 美國은 駐韓美地上軍으로 現場에서 南侵하는 北韓 共產軍을 저지하려 하겠지만, 戰爭이 長期化한다면 美地上軍을 철수시키고 軍裝備의 支援으로 후퇴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韓國의 內亂에도 美國은 속수무책일 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美國을 지배하고 있는 保守思潮의 根底에는 孤立을 추구하는 海外介入 거부반응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3. 「카터」의 對韓人權政策

「카터의 對外政策中 内外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고 발생을 가장 많이 부린것도 人權政策이었다. 韓國에도 例外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人權政策도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에 대한 변화와같이 변화되어 갔다. 3 단계 변화로 나누어 볼수있다.

제 1 단계는 駐韓美軍철수정책의 제 1 단계 조치와 마찬가지로 現地의 특수사정과는 관계없이 選舉公約대로 밀고 나가는 과정이었다.

「카터」대통령은 취임한지 2개월만인 77년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南美5개국들에 대해 人權問題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이 만약 人權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軍事援助를 삭감한다고 公開적으로 비난하였다¹⁷⁾

같은 달 「카터」대통령은 朴東鎮의무장관과의 白堊館회담을 갖고 『韓國의 人權問題에 관심을 강조』했던 것이다¹⁸⁾ 또 그로부터

보름후에는 明洞사건에 대한 大法院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카터」 행정부는 美국무성대변인을 통해 韓國 사태에 대한 美國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천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美國의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였다.¹⁹⁾

「카터」대통령의 이같은 공개적 人權비난은 먼저 中南美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中南美 5개국들이 「카터」가 人權을 내걸어 軍事援助 삭감 운운하고 나선다면 그에 굴복하느니 美國의 軍事援助를 차라리 거부하겠다고 배짱을 내밀었다.²⁰⁾ 「카터」人權政策의 목덜미가 中南美 국가들에 의해 잡힌 셈이다. 人權政策의 딜레마였다.

美國의 友邦中 人權違反國家들은 모두가 政治的 後進國이며 東西를 막론하고 強大國에 대한 被害意識이 높은 나라들이므로 強大國의 內政간섭에 生理的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카터」의 人權政策은 內政간섭이라는 저항에 부닥치게 되었다.

더우기 後進國의 경우 言論은 政府의 통제를 받는게 예사다. 따라서 「카터」가 人權문제를 들고 나오자 관련국가들은 言論을 동원하여 反美 民族主義무드를 일으켜 「카터」의 人權介入을 방어하기도 했다.

77년 4월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美國의 經濟援助 人權조항을 조건으로 달고나올때 그원조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경고한바 있다.²¹⁾

韓國에서도 마찬가지로 反應을 면치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카터」의 人權政策은 관련국의 거부반응에 부닥쳐 進退兩難에 빠졌다. 人權政策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밀고 나가느냐는 딜레마였다. 福音主義의 精神이 투철한 「카터」는 밀고 나가기로 하면서도 方法을 바꾸기로 하였다. 公開的인 접근에서 우회적이고 유도적인 懷柔政策으로의 後退가 그것이다. 外交경로나 기타 非公開的인 접촉채널을 통해 人權개선을 점진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제 2 단계 人權政策의 特性이라 하겠다.

제 2 단계 人權政策의 特性은 「몬테일」 부통령의 「필리핀」 방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리핀」은 美國의 前殖民地였으므로 美國이 「아시아」에서 어느나라보다도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나라는 非民主的 非常戒嚴下에 놓여있었다.

「카터」의 人權政策에 위반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카터」 행정부가 취임 후 즉각 中南美와 韓國에 대해 반응을 보였던 방식대로 한다면 「필리핀」의 사태는 「카터」의 公開的인 비난을 유발하기에 족했다. 그러나 「카터」는 공개적인 접근을 피하고 78년 5월 「몬테일」 부통령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공개적인 압력 대신 은밀한 懷柔策을 썼던 것이다.²²⁾

다음해 6월 「카터」는 직접 韓國을 방문하므로써 그의 內向化된 人權懷柔策이 韓國에 적용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朴正熙 대통령이 베푼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韓國도 經濟發展에 상응하는 政治發展이 따라야 보다더 國家發展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人權政策에 관한 그의 소견

을 피력하는것에 그쳤다. 「카터」의 訪韓은 韓國에 있어 美國의 政策이 人權보다 安保가 앞서며 人權政策이 공개적인 압력으로서가 아닌 懷柔로 후퇴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카터」의 懷柔策은 그런대로 實効를 거둘수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78년 自由選舉, 「에쿠아도르」에서의 自由選舉약속,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政治犯석방등이 그예라 하겠다. 韓國에서도 78년 12월에는 金大中을 비롯한 緊急措置위반자 1백 6명이 석방되었다.²³⁾ 79년 1월 「카터」는 78년 한해동안 적어도 16개 開發途上國家들에서 人權이 개선되었다고 지적하면서 韓國도 그중에 포함된다고 밝혔다.²⁴⁾

79년에 들어와 內向化로 후퇴한 「카터」의 人權政策은 한걸음 더 弱化되고 만다. 79년 2월 「이란」에서 親美 「팔레비」 政權이 붕괴되고 5개월만에 「니카라과」에서 또다시 親美 「소모사」 政權이 무너졌다. 親美 政權이 각각 무너지고 거기에 새로 등장한 革命政府들이 反美노선으로 돌아섰다는데 美國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카터」는 「팔레비」와 「소모사」에게 人權을 존중하고 民主化의 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었다. 거기에 따라 이들은 民主化를 단행하던중 革命세력에 의해 축출되고만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터」는 「이란」과 「니카라과」에 人權을 요구하다가 이 두나라를 송두리채 잃고만 셈이다. 人權政策을 再評價케하는 중대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여기서 「카터」는 人權이나 安保냐의 선택중 安保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79년말

에는 蘇聯이 「아프간」을 侵攻하고 나섰다. 世界 제 2의 原油輸出국
이요 西方原油輸送의 60%를 통과하는 「호르무스」해협을 장악하고 있
는 「이란」이 反美로 돌아선 마당에 불어닥친 蘇聯의 「아프간」침공
은 美國에 충격적인 도전이 아닐수 없었다. 「카터」의 對外政策은
이렇게해서 종래의 人權 중심에서 安保 우선으로 밀려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 2 단계로 후퇴한 人權政策의 內向化는 더욱
弱化될수 밖에 없었다.

「카터」人權의 內向化는 「카터」가 韓國을 訪問하고 돌아간후 얼마
안있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韓國에서는 같은해 2월과 7월
「이란」과 「아프간」에서 獨裁政權이 연이어 붕괴되고 世界 도처에서
自由와 人權이 크게 신장되어감에 자극을 받아 人權및 自由化운동이
날로 점고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결과 나타난것이 「YH女工」의 新民主黨舍농성, 金泳三 新民主黨總裁除名,
朴正熙대통령 시해, 學園自由化소요, 5.17 非常戒嚴全國확대, 光州사태등이
었다. 「카터」대통령의 訪韓 16주만에 일어난 「YH貿易」女工
들의 新民主黨舍농성 強制連行 8週만에 있었던 金泳三 新民主黨總裁 除名,
10주만에 일어난 釜山, 馬山, 學生대모에 대한 強力鎮壓등은 「카터」
의 初期人權政策을 상기할 때 「카터」行政府의 公開發의 反應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했다. 예컨대 中南美諸國에 대해 그러했던대로 對韓軍事支
援을 중단한다든가, 公開發의 韓國政府를 비난한다든가, 人權問題를 正
面으로 들고 나왔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행
정부는 公開發의 접근을 피하고 非公開發의 韓國의 自由와 人權의
伸張을 촉구하는 것으로 머물렀다. 「카터」人權의 內向化를 확인한
것이다. 積極적 人權改善策으로의 후퇴 그것이다.

이어 「10.26」 朴正熙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돌발했다. 「카터」 대통령은 18년동안 韓國을 지배해왔던 朴대통령이 떠나고 없는 韓國에서 즉각적으로 民主化를 단행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끌어가느냐는 2가지선택을 앞에 놓게 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이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점진적 民由化方式이다.

18년간 지배해왔던 朴대통령의 急逝로 韓國의 權力構造에 혼란이 야기될것은 당연했다. 內政의 혼란은 韓國社會의 특수여건으로 보아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長期執權과 經濟急成長으로 불가피했던 貧富격차, 不正腐敗,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괴리현상, 政府權力層 및 企業에 대한 不信 등이 만연한 상태에서 社會的 혼란이 야기된다면, 被壓迫階層의 解放과 無產大衆의 權利를 요구하며 階級革命을 내세우는 共產主義의 침투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美國은 판단했던것 같다. 뿐만아니라 美國은 비록 韓國의 社會的 혼란이

共產主義 침투를 몰고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以情不安을 고질화시켜 美國의 對韓政策을 不安하게 만든다는데 留意하지 않을수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밖에도 韓國內政 不安의 고질화는 北韓의 對南赤化野慾을 자극한다는것도 美國은 우려치 않을수 없었다.

사실 「10.26事態」가 일어나기 8개월전의 「이란」革命이나 3개월전의 「니카라과」革命에서 美國은 急進的인 政變이란것이

얼마나 不安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이해할수 있다 自由와人權이라는 이름아래 「이란」과 「카타과」에서 群衆蜂起가 일어나 既存獨裁政府를 전복시킬수는 있었으나, 그후에 들어선 新政府들은 親美에서 反美로 돌아서고 말았다. 後進國에서 政治的 急變이라는것이 美國의 對外政策에 얼마나 不安要素를 물고오는가를 통감케하기에 족한 사태발전이요, 敎訓이 아닐수 없었다.

따라서 「10.26事態」이후 美國의 對韓政策은 비록 18년 長期執權者의 急逝로 自由民主化의 기회가 도래하였다는 치머라도 急進的 自由化 아닌 점진적 民主化를 추구했던 것이다. 「10.26事態」가 돌발하자 美國의 「카터」대통령은 즉각 哀悼의 뜻을 표하는 吊電을 대통령권한대행인 崔圭夏국무총리에게 보내면서 韓國에 대한 美國의 防衛公約을 확고히 이행할것임을 보장한다고 뜻을 밝혔다. 「카터」대통령은 같은 吊電에서 『朴대통령은 美國의 굳건한 친구요 확고한 盟友이며 유능한 領導者였다』고 밝히고는 『놀라운 經濟發展을 기하는데 朴대통령이 보여준 指導力은 길이 기억될것』이라고 밝혔다. 25)

「카터」대통령이 吊電에서 故朴대통령을 가리켜 美國의 굳건한 친구요 확고한 盟友이며 유능한 領導者로 표현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길이 추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것은 통상적인 故人에 대한 禮儀 이상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禮儀 이상의 뜻이란 朴대통령 이 韓國經濟發展에 기여한바 적지않으며 유능한 영도자이므로 그의 政治體制가 즉각 否定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合憲的 절차에 따른 점진적 體制改善이 韓國의 發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先安定」「後變革」의 等式을 의미한다.

그같은 「카터」의 對韓政策은 朴대통령 國葬에 참석차 11월초 來韓했던 「사이러스 밴스」美國務長官의 離韓聲明에서 여실히 뒷받침되었다. 「밴스」장관은 이 聲明을 통해 『韓國政府가 合憲的인 절차에 따라 民間政府에 의해 秩序整然한 方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決定은 밝은 장래를 기약한것』이라고²⁶⁾ 밝힌 대목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12월초 「리처드 홀부르크」美國務省 「아시아」太平洋 담당차관보가 『朴대통령 殺害사건이 있는 후의 첫달은 韓國이 世界의 工業國 대열에 끼어든 과정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고무시켰다』고 말했다.²⁷⁾ 「홀부르크」의 論評도 朴대통령사후 추진되어 왔던 政治體制의 점진적 改革을 환영하는 뜻이며 急進的 變革을 美國이 두려워하고 「先安定」「後變革」을 바라고 있음을 반영한 사례가 아닐수 없다. 政治的 急變을 추구하다 韓國이 「이란」과 「니카라과」같이 革命의 소용돌이속에 넘어가느니 보다 「카터」대통령이 吊電에서 강조했듯이 『美國의 굳건한 친구요 확고한 盟友』로 남기를 바란다는 뜻도 있다.

그후 發生한 「12·12事態」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評價도 「先安定」「後變革」의 원칙에 입각할 수밖에 없었고 光州事態에 대한 評價 또한 마찬가지였다. 光州事態에 관한 「카터」행정부의 評價마저 「先安定」「後變革」에 바탕하고 있었던것만은 사실이지만 光州事態이후 「카터」행정부의 對韓政策은 二重性을 띠기 시작했다.

「5·17非常戒嚴全國擴大」조치와 光州事態 그리고 연이은 과감한 政治 및 社會肅正등의 強行으로 韓國집권층에 대한 内外 國民들의 反感이 尖銳化하자 美國은 「先安定」「後變革」 論理에 따른 安定 為主政策이 중대 시련에 봉착하였음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安定為主로 임하다 보니 韓國집권층에 대한 지지로 간주되어 急變을 요구하여 집권층에 불만을 갖고 있는 韓國內 일부 인사들의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만것이다. 「카터」행정부는 韓國의 反政府세력들로 부터 자칫하다가는 『양키 고평』의 구호세계를 받지않을까 우려치 않을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카터」행정부는 二重政策을 펼치기로 한것 같다. 다시말해 韓國에서 安定爲主의 종래원칙을 지켜가면서 한편으로는 反政府人士들의 反感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韓國政府에 대해 公開적으로 人權 및 自由化추구를 권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같은 二重政策은 80年 6月 1日 光州事態 10여일만에 행한 「카터」대통령의 特別會見에서 여실히 반영되었다. 「카터」는 美國의 對韓政策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첫째는 外部攻擊 주로 北韓의 侵略에서 韓國을 保護하는 安保문제이고

둘째는 韓國에서의 人權과 함께 民主化發展을 고양하고 民主體制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28) 「先安定」 「後民主變革」이라는 「카터」의 對韓政策을 반영한 것이면서도 종래와는 달리 「카터」가 特別會見을 통해 공개적으로 人權과 民主化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은 韓國政府에 대한 不滿勢力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韓國과 그밖의 나라에서 일고있는 일부 反政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80년 8월초 「존 위컴」駐韓美軍司令官이자 韓美聯合軍司令官이 全斗煥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常任委員長을 美國이 지지하고 있으며 그는 肅正으로 韓國民의 지지를 획득했고 自立을 추구하며 韓國을 이끌만한 能力을 소유했다고 AP通信과의 회견을 통해 公言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컴」장군을 「카터」행정부가 轉職시키지 않고 韓國에 계속 근무케 한다는 것은 美國이 全斗煥 國保委 常任委員長이 이끄는 韓國과의 유대를 지속시킬것을 바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全斗煥위원장이 統一主權國民會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카터」美國대통령은 全대통령에게 親書를 전달했다. 全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로 출범한 韓國政府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韓國의 政治日程이 國民의 광범위한 支持基盤위에서 合憲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30)

「카터」의 親書는 光州事態 이후 두갈래로 갈라진 美國의 對韓政策을 또한번 公開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全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히므로써 「先安定」에 바탕하고 있는 美國의 입장을 시사하면서 또한편으로는 韓國의 政治日程이 合憲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므로써 韓國內의 反政府 및 美國内の 反韓여론을 무마하려는 兩面政策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같은 「카터」대통령의 對韓人權政策 進化過程을 참고로 한다면 그가 次期 美國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形態로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카터」대통령의 전반적인 人權政策은 初期에는 公開的이고 위압적이었으나 차차 內向化되었으며 「이란」과 「니카라과」의 革命으로 韓國에서는 人權과 自由向上보다 安定과 安保強化가 더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다. 이리인해 「카터」의 對韓人權政策은 「先安定」「後變革」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일각에서 일고 있는 反政府 및 反韓무드를 우려, 다시 公開的으로 人權 및 自由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카터」는 次期 大統領으로 당선된다해도 「先安定」「後變革」이라는 基本方針에는 變化가 없을 줄 안다.

특히 美國에서 保守主義思潮가 深化되는 狀態이고 蘇聯의 「아프간」侵攻으로 對共警戒心이 드높아 가고 있다고 할때 「先安定」「後變革」 論理는 한동안 계속되리라 믿는다.

둘째, 全斗煥대통령이 新憲法에 따라 大統領으로 再選된다면 美國여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合憲的인 절차』에 따라 당선된 大統領임을 否認할 수 없으므로 「先安定」「後變革」의 基本觀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카터」가 次期대통령으로 당선된다해도 「先安定」「後變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韓國이 民主化를 점진적으로라보

기해야 한다는 그의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蘇聯의 「아프간」 侵攻衝激이 가라앉고 「이란」과 「니카라과」 革命의 여파가 수그러지고 「이란」 「이라크」 戰爭을 비롯 中東問題가 한숨을 돌리게 되면 「카터」대통령은 韓國의 民主化 추진을 보다 밀도있게 요구하고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밀도있는 人權政策 추진이라는 것은 公開的이며 위압적인 접근이 아니라 非公開的인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人權문제를 놓고 韓國政府와 正面으로 충돌하여 韓美關係를 惡化시키느니 보다는 内向化된 人權政策의 범주안에서 은밀히 民主化的 단행을 촉구하리라는 것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韓美關係에 있어 韓國의 独自の 입장이 強化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같이 對韓人權政策이 위압적이 아닌 非公開的이며 說得的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4. 「카터」의 對北韓政策

「카터」의 對北韓政策은 對韓人權政策이 그러하듯이 二重主義的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軍事的으로는 철저히 封鎖하되 政治的으로는 和解를 모색하는 兩面性 그것이다. 이같은 兩面性은 美國이 平和 共存時代에 共產國들에 적용했던 것으로써 한쪽으로는 共產國과 和解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共產國들의 赤化野慾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軍事的으로 封鎖해왔던 것과 똑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카터」대통령의 二重主義的 對北韓政策은 美國의 全世界的

和解政策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카터」대통령은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北韓의 好戰性에 대한 警戒態勢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對北韓 접근모색에도 첫 任期동안 신경을 경주했다. 「카터」는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2개월단인 77년 3월 18일 北韓을 비롯한 「베트남」「쿠바」「캄보디아」등에 대한 美國人의 旅行禁止규정을 철폐하였다. 共產과 民主 兩陣營의 和解를 위해서는 共產國과 緊張을 풀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北韓 「쿠바」「캄보디아」「베트남」과 같이 美國에 好戰性을 감추지 않는 惡性 共產國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던 종래의 對敵性國 強硬노선을 크게 완화한 조치였음에 틀림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好戰的 共產國家들에도 접근해 들어야겠다는 「카터」 外交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적극적인 접근원칙에 따라 「카터」대통령은 77년 9월 「티토」「유고」대통령이 蘇聯, 中共, 北韓 巡訪길에 오르자 韓美兩國과 北韓의 三当局會議를 제의하였다.³¹⁾ 北韓은 「티토」를 통한 美國의 三当局會議 제안을 거부하긴 했지만 「카터」행정부가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관심을 갖고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제 35회 世界卓球選手權 平壤大會를 계기로 美國選手團의 平壤大會 참가를 요청하였다. 6년전 中共이 日本의 「나고야」에서 열렸던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서 개별적으로 美國選手團을 中共으로 초청하여 美·中共關係改善의 기틀로 삼았던것을 北韓은 원용하려 기도했던것 같다.

北韓이 3회에 걸쳐 美國에 초청장을 보내자 「카터」행정부는

韓國팀의 平壤大會 참가가 北韓측에 의해 封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팀의 참가를 許可했다. 美國은 최초로 北韓에 美國스포츠팀의 入北을 許可한 것이다. 79년 4월 선수 9명에 기자 36명과 任員 26명 관광객 9명까지 합쳐 도합 80명이 平壤에 들어갔다.

선수 9명에 수행원이 10여배에 달했다는 것은 平壤卓球大會에 美國팀을 보내는 「카터」행정부의 意中을 충분히 엿보게 하기에 족했다. 종래의 어느 美國행정부 보다 「카터」행정부는 北韓에 적극접근하기로 하였음을 반영한 意中 그것이었다.

이같은 「카터」의 意中은 계속 드러났다. 美國은 「롱 아일랜드」의 「나소」에서 79년 6월 열릴 美國 오픈卓球選手權大會에 北韓팀을 초청하였는가 하면³²⁾ 北韓농구팀을 초청, 80년 1월 美國內 전역을 巡回하며 親善競技를 가질것을 제의하였으며³³⁾ 80년초 美國에서 열릴 國際親善권투대회에 北韓팀을 또한 초청하였다.

뿐만아니라 「카터」美國대통령은 79년 6월 서울을 訪問하고는 美國과 南北韓이 함께 자리를 하는 3当局 會議를 열자고 朴正熙 - 「카터」 共同聲明을 통해 北韓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카터」행정부의 對北韓접근은 도리어 北韓측에 의해 拒否反應을 불러 일으켰다. 美國을 北韓으로 끌어들이는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美國이 韓國을 동반하고 北韓에 들어오려는데 불만을 품은 것이다. 그와같은 불만은 北韓이 거절하고 돌아서버린 美國의 北韓 스포츠팀 초청과 3当局 회담제의 拒否에서 드러났다. 北韓은 美國이 제안한 스포츠팀 美國訪問을 韓國의 동시 참가를

우려한 나머지 거부하거나 中共의 互惠的인 韓國스포츠팀 초청을 두려워한 나머지 美國의 北韓스포츠팀 초청을 스스로 거절하고 나섰다. 마찬가지로 뜻에서 北韓은 「카터」의 3当局會議제안도 韓國의 참가를 의식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79년을 계기로 美國과 北韓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美國이 北韓에 접근하려는 것은 北韓을 밖으로 끌어내 好戰性을 완화시키며 韓國과의 접촉을 넓혀 南北韓의 平和共存體制를 마련하고 美·日·中·蘇 4強에 의한 南北韓 交叉承認을 이룩하여 南北韓으로 긴장돼 있는 韓半島에도 和解의 불결을 일게하자는데 있었다. 여기에 반해 北韓의 對美接近속셈은 판데 있다. 73년부터 그들이 요구했던 美-北韓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韓國을 따돌리고 美國과 직접 접촉하므로써 韓國에서 美國이 손을 떼게 하고는 越南의 경우처럼 南韓을 共產化하겠다는 속셈이다. 同床異夢이라고나 할까. 서로 共通點을 쉽게 찾기 어려운 利害相衝이었다.

그러나 것처럼 엇갈리는 利害相衝속에서 美·北韓 양측은 잠정적 利害의 一致點을 찾은듯하다. 양측은 非政治的 차원에서 접촉을 넓혀 서로 理解의 기반부터 다져가자는 共通點 그것이다.

이결과 나타난 것이 양측의 非政治的 차원에서의 人的交流이다. 80년 2월 美國은 北韓올림픽委員會委員 5명의 美國入國을 許可했다. 冬季 올림픽委(IOC)총회 참석을 위한 美國入國이었지만, 「뉴욕」에 설치된 北韓 「유엔」음서버단의 「뉴욕」常駐를 許諾한이래 北韓 體育會의 고급 간부들을 美國에 入國시키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어 7월에는 「스티븐 솔라즈」美下院
國際關係委 「아시아」太平洋小委員이 韓國의 拒否反應을 의식한
나머지 「個人資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平壤을 방문하였고 거기
에 「뉴욕 타임즈」東京支局長 「헨리 스코트·스토크스」와
「랄프 클리프」「조지 워싱턴」大教授가 수행하였다. 9월에는
美國務省 前代辨人 「토마스 레스턴」이 또 「個人資格」이란 명분
을 平壤을 여행하였다. 같은달 美國의 「퀘이커」教 대표단이
平壤을 방문하였다.

이같은 美國人들의 北韓訪問에 대한 美國행정부의 반응은 분명
했다. 「존 캐넌」美國務省대변인은 『그러한 非公式 접촉에 意義를
부여치않으며 그러한 활동을 장려하거나 억제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³⁵⁾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앞으로 非公式 접촉이 계속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美國은 일단 北韓과 非政治的
접촉을 活性化하여 北韓을 平和的으로 開化시켜 南北韓의 平和定着
에 응하도록 물고갠다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 프로그램속에는
北韓을 「유고」의 경우처럼 中立地帶로 활용하고자하는 장기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北韓은 北韓대로 美國
과의 理解폭을 넓혀 美國을 北韓쪽으로 끌어들이 美·中共 관계와
같이 美·北韓 관계를 개선시켜 韓國을 越南化 하자는 속셈으로
美國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터」대통령이 再選된다고 할때 그의 對北韓政策은
다음과 같이 展望될 수 있다. 첫째, 北韓의 對南好戰性を 경계

하면서 北韓에 대한 非政治的 차원의 交流를 점차 증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카터」행정부의 최근 對北韓 接近活性化가 韓國政府에 대한 外交的 壓力지렛대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韓美관계와 같이 安條문제가 서로 밀착되어있는 경우에는 共通의 敵으로 삼고있는 北韓과의 關係개선을 外交的 지렛대로 이용키 어렵고, 도리어 韓美 양국관계의 상호 신뢰를 위협할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카터」행정부는 對北韓 接近을 活性化하는 나머지 北韓의 國際的 地位만을 높여줄 우려가 있으며 北韓에 대한 貿易禁輸조치를 解除하고 民間차원에서의 經濟交流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日本과 北韓과 현재 이뤄지고 있는 形態의 經濟交流를 시도할는지 모른다.

넷째, 그러나 새로 구성될 美議會가 보다 保守化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保守思潮가 더욱 深化될 것이므로 「카터」행정부의 對北韓 接近活性化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中共과의 關係가 더욱 진전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아시아」共産國家에 대한 警戒心도 弱化되어 對北韓接近은 中共버람과 함께 꾸준히 추진된다고 보아야 한다.

로 21

第二部 「리건」新 行 政 府

1. 「리건」의 對 韓 軍 事 政 策

共和党的 대통령후보로 「로널드 리건」 前「캘리포니아」州 知事가 5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党的 指名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共和党内의 政治潮流 또한 保守化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원래 共和党이 民主党보다 전통적으로 保守性を 지니고 있는 터인데 거기에다 「리건」과 같이 保守中の 保守로 알려진 인물이 지명되었다는에서 党内의 保守氣流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알고도 남게 한다.

民主党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도 「카터」대통령이 進歩派 기수로 알려진 「에드워드 케네디」와 「제리 브라운」을 압도하고 승리하므로써 民主党内에서도 保守思潮가 深化되고 있음을 실증했다고 했다. 「리건」도 保守的이긴 하지만 그보다 弱한 노선을 천명했던 「조지 부시」 「존코넬러」 「필립 크레인」 「존 앤더슨」 「보브도울」등을 후보지명전에서 물리치므로써 美國의 兩大政黨이 완전히 保守思潮에 휘말려 있음을 반영했다.

문제는 이 두후보중에서 누가 더 保守的 성향을 띠고 있는냐는 데 있다. 당연히 「리건」후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리건」의 保守性은 80년 8월 18일 「시카고」에서 열린 海外參戰勇士會 年例總會에서 행한 연설로 충분히 드러났다. 「리건」은 이때까지 美國歷史上 유례없는 失策으로 간주돼왔던 美國의 越南介入을 도리어

찬양하고 나섰다. 그는 美國의 越南介入이 「崇高한 使命」이었다고 선언하므로써 越南戰介入을 지지하는 최초의 政治人이 되었다. 「리건」은 越南에서의 美國失策은 戰爭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勝利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美國은 外國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만 平和가 온다고 단순한 주장에 너무나 오랫동안 휩싸여 왔다고 통박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36)

사실 「리건」 자신의 그와같은 保守性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韓半島문제와 관련하여 그같은 성향은 68년에 이미 분명히 드러난 바 있었다. 68년 1월 北韓이 美國의 정찰함정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자 당시 「캘리포니아」州知事로 있던 「리건」은 T.V 회견을 통해 美國國기를 휘날리고 있던 美군함이 「5 동국」에 지나지 않는 北韓海軍에 굴복당하였다는 것은 美國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분개하면서 즉각 美軍을 동원하여 나포된 「푸에블로」호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37)

「리건」의 그같은 強硬路線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80년에도 변함이 없다. 共和黨의 대통령후보 지명이 확정되자 「리건」은 6월 20일 駐韓美軍 철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만약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北으로부터 어떠한 사실상의 위협이 존재하는한 美軍의 감축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38)

그밖에도 對外政策에 있어 強硬路線을 내세우는 「리건」의 기본 방향은 共和黨이 80년 7월에 政綱으로 채택한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民主黨이 政綱으로 戰略武器制限 2 단계 (SALT II) 協

정의 早期批准을 주장하며 蘇聯과의 宥和的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共和黨은 SALT協定の 批准을 거부하고 나섰으며 對蘇軍事力 優位를 강조하였다.

共和黨의 이같은 軍事力 優位확보는 기왕의 美蘇和解를 저해하더라도 우선 힘을 길러 놓아야 한다는 것으로써 蘇聯을 믿고 和解體制를 유지 할 수 없다는 對蘇警戒心의 강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駐韓美軍 문제에 관해서도 民主黨 政綱은 駐韓美地上軍의 撤収計劃 「中止」에 그쳤는데 반해 共和黨은 美地上軍 및 空軍力의 現水準維持로 표시했다. 撤収中止나 現水準維持나 駐韓美地上軍을 유지시킨다는 뜻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民主黨의 中止」는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철수를 再開하겠다는 뜻이고 共和黨의 「維持」는 계속 묶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바꿔말하면 「리전」이 76년에 오늘과 같은 「維持」政綱을 들고 나왔더라면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은 애당초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論理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리전」이 次期 大統領으로 당선 된다면 그의 對韓軍事政策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리전」대통령은 「카터」와는 정반대로 선거공약으로 駐韓美軍의 계속적인 주둔을 내세웠으므로 그의 첫 임기중 美軍철수를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 「리전」은 68년의 「푸에블로」호 被拉때부터 北韓의 好戰性에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고 나섰던 인물임을 상기한다면

對北韓 警戒態勢는 2차대전후 美國의 어느 대통령보다 높을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리건」이 보여준 對共 및 對北韓 強硬자세는 對韓軍事販売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셋째, 北韓이 「푸에블로」호 납치나 「8.18 도끼만행」과 같은 好戰행위를 저지른다면 「리건」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응징책을 본보기로 강구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北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美國의 힘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北韓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따끔한 맛을 보일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넷째, 그러면서도 北韓이 中蘇軍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單獨으로 南侵한다고 할때 「리건」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90일간의 전쟁수행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駐韓美地上軍 및 空軍을 동원할 것이지만 美國本土의 兵力을 韓國戰線에 투입할 수 있을것인가는 매우 불확실하다. 만약 「리건」이 당선된다해도 次期 美國議會는 上院과 下院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民主黨이 지배할 것이 확실하므로 海外介入에 인색한 民主黨 지배하의 美議會가 과연 共和黨대통령의 派兵要求를 들어줄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리건」 자신이 표방하고 있는 保守思潮속에는 海外介入 보다는 孤立을 염원하는 潮流가 흐르고 있으므로 全美國인들이 6.25參戰과 같은 介入을 원할 것으로 보기는 극히 어렵다.

2. 「리건」의 對韓人權政策

「리건」이 次期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美國의 人權政策은 거의 無視해도 可함을 정도로 관심밖의 것으로 후퇴한다. 그러한 「리건」의 태도는 6월 「카터」의 人權정책을 비판한 연설에서 반영되었다. 「리건」은 「카터」행정부가 共產세계의 실정을 외면한채 人權 문제로 友邦同盟國들을 괴롭혀 왔다고 비난하며 「不完全한 세계의 現實」을 고려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 그대목이다. 39)

「不完全한 세계의 現實」이란 人權에 관한 完全한 상태란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일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며 完全한 人權要求로 友邦同盟들을 괴롭힐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리건」은 선거를 보름 앞둔 10월 14일 韓國記者와의 회견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韓國을 방문하여 韓國政府와의 好關係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40)

「리건」이 韓國을 방문해서 韓國政府와의 友好關係를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은 80년 「5.17」조치이후 韓國政府와 간간히 말썽을 빚고있는 韓國의 人權과 民主化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韓美關係는 人權보다 安保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원래 2차세계대전후 美國정부가 人權에 관심을 공식으로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였다. 越南戰에 대한

염증과 그로인한 海外介入 축소무드속에 묻어나온것이 美國友邦에 대한 人權규탄이었다. 당시 反戰무드에 휩싸인 美國知識人 및 政治家들은 後進國으로 부터의 美軍철수 및 美國介入포기의 구실로써 人權문제를 들고나왔다. 自由를 박탈하고 共產主義와 다른없는 獨裁體制를 굳혀가고 있는 美國의 友邦은 美國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獨裁體制라면 共產이나 民主友邦이나 마찬가지로인데 友邦이라고 해서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論理이다.

그대표적인 예가 「폴브라이트」上院議員의 人權警告이다. 그는 73년 4월 3일 「닉슨」 행정부가 요청한 軍事援助法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美國의 軍援은 「軍事統治에로 넘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오늘날 美國이 당면한 문제는 세계의 共產化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軍事統治化에 있다고 갈파했다. 41)

그로부터 8개월만인 12월 進歩系에 의해 지배되어 있던 美議會는 海外援助法 32條를 채택했다. 이 條例에 따르면 美國대통령은 「政治目的으로 自由市民을 투옥시키는 外國政府에 대해서는 經濟 및 軍援援助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議會의 意見이다」고 밝혀놓았다. 42)

海外援助法 32조와 「폴브라이트」의원이 선언한테서 나타난바와 같이 自由를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비록 友邦이라 할지라도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폴브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共產化위협 보다 軍事統治가 더 무섭다는 태도였다.

이와같은 태도는 앞에서 말한대로 越南戰에 대한 염증으로 빛어진 海外介入 축소에 연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共產主義의 위협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樂觀論에 기인한다. 友邦의 軍事統治가 共產主義 위협보다 더 문제거리라는 兇想 그것이다. 당시 海外介入을 증오하는 美議회의 무드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는 大統領의 戰爭遂行權限制法案 통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美國의 上下兩院은 宣戰布告없이 大統領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90일로 제한한 法案이 「닉슨」대통령에 의해 비토된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法案을 73년 11월 다시 再可決하고 말았던 것이다. 43)

가능하면 海外에 개입하게 만들 요건들은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對內的으로는 海外後助法 32조를 신설하여 獨裁政府라는 구실을 붙여 後進國으로 부터 손을 떼게하고 宣戰布告 없는 大統領의 戰爭遂行權限을 90일로 제한하므로써 제 2의 「베트남」전과 같은 局地戰介入을 예방하고자 했다.

美國이 70년대 초반 그렇게 海外介入 반대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反戰思潮와 蘇聯위협에 대한 過小評價때문이었다. 美國은 치욕적인 철수이긴 하였지만 일단 越南戰에서 빠져 나오므로써 國力の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으며 中共과의 和解로 유리해진 美國의 對蘇입장이 유리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써 당시 美國人들은 오랫동안 安保上 안도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安保的 안도감속에 싹튼것이 바로 人權政策이기도 하다. 中蘇의 軍事위협이 급박하지 않는한 美國의 理想으로 전해오는 自由民主理念을 友邦에 펼쳐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人權政策은 海外介入 축소와 中蘇위협에 대한 過小評價에서 오는 안도감 그리고

美國 理想主義의 추구등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人權政策을 출현케한 요소들은 越南이 75년 4월 共產化 되면서 부터 다시 弱化되기 시작했고 蘇聯의 軍事力이 그후 急增하자 한층 더 흔들리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란」의 親美 「팔레비」政權과 「니카라과」의 親美 「소모사」政權붕괴 그리고 蘇聯의 「아프간」침공으로 거의다 날라가버린 셈이다. 越南赤化와 蘇聯의 「아프간」침공은 美國의 對蘇 및 對共警惕心を 높여주었고 「이란」과 「니카라과」政府가 反獨裁 기치아래 전복되고 그들이 反美로 돌아서게되자 美國은 人權을 友邦에 주장하다가는 友邦의 安保를 잃고만다는 쓰라린 敎訓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人權政策을 출현시킨 환경적 요인이 크게 弱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次期 대통령으로 「리건」이 당선된다고 할 때 그의 對韓人權政策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건」후보가 선거유세때 「카터」의 人權政策이 友邦同盟國들을 괴롭혀왔다고 지적한 사실이라든가 「不完全한 세계의 現實」을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韓國을 방문하여 聯國政府와의 友好關係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을 감안해도 「리건」은 韓國에 人權문제를 크게 제기 할 것 같지 않다. 더우기 美國에 人權政策을 출현시킨 환경적 요소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할 때 「리건」은 人權문제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된다. 道德보다는 「힘의 優位」를 그가 내세우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둘째, 그렇지만 美國에 人權政策을 탄생시킨 환경적 요인들중에서

獨立戰爭 당시부터 전해오는 自由民主主義 理想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때 美國內에 있었던 人權의 관심이 모두 사라졌다고는 할수 없다. 더욱기 共和黨보다 進歩性이 뚜렷한 民主黨이 이번 선거에서도 美議會를 지배한다면 民主黨의원들은 기회있을때 마다 「리건」행정부에 人權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실 「닉슨」과 「포드」행정부 당시의 예를 상기할 수 있다. 그때 民主黨 및 共和黨의 進歩系 議員들은 「닉슨」에 이어 「포드」행정부에 대해 韓國에 人權政策을 적용토록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한바 있었다. ⁴⁴⁾

「리건」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환경적 요건의 변화로 그해와 같은 강력한 進歩系의 人權壓力을 받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압력은 議會 및 일부 여론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리건」의 對北韓政策

「리건」의 對北韓政策은 아직 그가 北韓에 대한 구체적인 언질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리건」의 對外國과 對共警戒心 등을 참고로 대략 윤곽은 포착할 수 있다.

「리건」의 分斷國에 對한 기본태도는 「2개의 中國論」에서 선명하다. 「리건」은 「카터」대통령이 79년 1월 1일을 기해 폐기시킨 臺灣과의 公式外交關係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했다.⁴⁵⁾ 물론 그와같은 臺灣과의 國交再開가 곧 中共과의 斷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건」의 기본태도는 「닉슨」과 「카터」가 굳혀놓은 1 中國 1 國家 原則을 깨뜨리고 1 中國 2 國家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10 億人口의 中共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1천7 백만 인구의 臺灣쯤 소외시켜도 괜찮았던 종래 美國政策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리건」이 2개 中國을 주장하는 저변에는 철저한 反共 및 對共警戒心이 깔려있음을 반영한다. 共產主義者 中共은 國家로서 認定해 주고 臺灣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國家로서 美國이 오랜동안 승인했던것을 이제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며 어떻게 같은 中國民族인데 共產主義者들은 國家로서 인정하고 自由民主主義者들은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리건」은 中共을 쳐부시고 그자리에 臺灣政府를 다시 들여 앉히려는 妄想에 사로잡혀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臺灣은 아무리 인구가 中共에 비해 적다손치더라도 中共이 國家로서

인정되어 있는한 台灣도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 獨立政府로서 갖출것을 다 갖추고 있는 台灣政府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實用主義 外交哲學의 발로라고도 할수있다.

이와같은 「리건」의 對台灣 再修交 주장은 分斷된 南北韓 문제에 어떻게 임하리라는 점을 주축케 하기에 족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는 中共이나 蘇聯과의 관계를 위해 韓國과의 관계를 格下시키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리건」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韓國의 위치를 國際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건」이 그와같이 美國과 北韓관계 또는 美國과 中蘇 관계를 위해 韓國을 희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가 北韓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리건」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可能한한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어떤형태고 간에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可能性은 「리건」이 그동안 對外政策에 관해서 피력한 기록을 통해 엿 볼수 있다. 「리건」은 새삼스럽게 「2개의 中國論」을 폈다고 인용했다. 「카터」행정부가 폐기한 美 台灣國交를 다시 再開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美國과 台灣과의 關係回復을 주장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中共과의 관계를 이제와서 斷切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데 留意해야 한다. 台灣과는 國交를 再開하되 동시에 中共하고도 기존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는 태도이다. 「리건」후보는 80년 8월 美 台灣정부간의

공식관계 수립이 美國의 對中共外交關係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데서 그렇다. 46)

사실 「리건」의 對共警戒心이 누구보다 강렬하고 共產主義者들과의 對決이란 軍事力の 優位 確保밖에 없다고 믿고있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수십년간에 걸쳐 共產國들과 다져놓은 和解體制를 모두 허물어뜨리고 軍事力對決로 逆轉하자는것은 아니다. 이미 東西양진영은 對決만을 일삼을때 核戰爭의 세레를 면키 어렵게 되어있으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敵과 和解하며 共存할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리건」의 對共強硬策은 본질적으로 共產國과의 對話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對話를 하되 美國의 힘이 優位에 서는 對話를 하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폐기된 台灣과의 國交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中共과의 기존관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천명한 태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리건」후보의 兩面性으로 보아 그의 對北韓政策 또한 兩面性을 지닐것으로 추측키 어렵지 않다. 對北韓警戒태세를 강화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北韓과의 對話통로를 모색하리라는 것이다.

「리건」의 對北韓 接近可能性은 지난날 「카터」행정부하에서 美國人士들의 北韓방문에 대한 그의 침묵에서도 엿보인다.

「리건」이 共和党的 大統領후보로 黨의 지명을 획득한 후 美國人士들의 北韓방문이 分斷이후 최초로 시작될바 있다. 7월말 「스티븐 솔라즈」下院議員이 처음으로 美公職者로서는 北韓을 방문하였고 9월에도 「토마스 레스턴」前職 美國무성대변인이 또 平壤을,

그리고 곧이어 「웨이커」教徒들이 北韓을 집단적으로 방문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다.

美國人들의 北韓방문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리건」共和黨대통령후보는 그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치 않았다. 美國人들의 北韓방문에 관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리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해도 美國人들의 北韓방문을 억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추측케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가능한한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中共에 대해 그러했듯이 北韓에 대해서도 밖으로 끌어내 教化시키자는 「카터」의 기본노선을 「리건」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리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對北韓政策은 다음 類型으로 나타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첫째, 北韓의 好戰行爲에 대해서는 強硬한 대응으로 응징하며 對北韓 警戒態勢를 強化하면서도 北韓과의 關係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美 北韓交流를 조심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의 對北韓 경제태세가 워낙 강렬하므로 「카터」행정부 보다는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가리라 관측된다.

둘째, 「리건」행정부는 北韓과의 交流를 모색할지라도 韓國의 地位가 조금도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간주된다.

셋째, 「리건」행정부는 힘에 바탕한 對共協商原理를 견지하려 할 것이므로 「카터」대통령이 79年 7月 北韓측에 제안한 「3當局 會談」같은데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리건」행정부는 分断国家에서 1民族 2国家의 원칙을 台湾의 경우에서 처럼 분명히하고 있으므로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 같은것을 적극 모색하지 않겠나 추측된다.

다섯째, 「리건」자신의 对共警戒心이 철저하지만 美国内에서 일고 있는 美国의 非同盟志向性에 밀려 계속 北韓接近을 促求하는 勢力이 늘어날 것이고 「리건」도 그같은 潮流에 이끌리기 쉽다.

第三部 日本新政府

1. 스즈키의 穩健保守

1980年 6月22日 日本에서 일제히 실시된 衆議院과 參議院 선거 결과는 日本의 政治思潮가 美国의 경우처럼 保守化되어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통 保守党인 自民党은 衆議員 선거에서 国会解散전보다 26석을 추가하므로써 衆議員 5백11석중에서 과반수가 될선 넘는 2백84석을 確保하였다. 과반수에서 28석을 넘은 것이다. 參議院에서도 마찬가지로 自民党은 3년만에 2백52석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47)

日本總選의 그와같은 결과는 日本國民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政治的 安定, 經濟的 번영, 전실한 安保体制를 지속시키기를 바라고 있음을 투명한 것이다. 革新野党에 맡겨 不安스러운 改革보다는 安定된 지속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革新系에 대한 日本有權者들의 냉담한 반응은 이번 總選에서 共産党이 12석이나 잃었고 公明党이 25석 民社党이 4석을 놓쳤다는데서 반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革新野党勢가 강한 東京都에서도 社会党首「아쓰가다」(飛鳥田一雄)가 3위로 겨우 당선되고 社会党的 書記長 다가야(多賀谷真繪)가 낙선한데서 증명되었다. 그밖에도 保守 自民党에 당적을 두고 革新을 앞장서서 표방했던 親北韓係「우스노미야」(宇

都宮德馬)前 自民党的의원과 共産党서기장 「후와」(不破招三) 등이 모두 최하위로 겨우 당선된 반면 右派의 「이시하라」(石原慎太)가 최고 득표로 4선되었다는 비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치적한대로 共産 民社 公明党들이 크게 의석을 잃었고 社会党은 겨우 현상을 유지했으나 得票에 있어서는 퇴조를 면치 못했다. 다만, 自民党에서 分党한 「新自由클럽」이 총선의 4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나므로써 保守政治를 원하면서도 日本有權者들은 政治家의 新陣代謝를 요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같은 保守潮流를 타고 등장한것이 「스즈키 젠코」首相과 그의 内閣이다. 「스즈키」首相은 自民党的의 総務会長을 9期나 맡았던 경력이 시사하는 바와같이 党内 派閥대립을 잘 조정해나가는 調整役으로 유명하다.

72년 「다나카」内閣이 日·中共国交正常化를 내세웠을 때 이에 반발한 「후쿠다」파를 무마시켰고 「사토」内閣의 厚生相때는 큰 压力 団体인 日本医師会和 厚生省間의 단절상태를 和解로 전환하는 등 조정숨씨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스즈키」首相이 名調整者로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政治的 力量과 識見을 갖고있는 것으로는 알려진바 없다.

그는 厚生相 農相·官房長官을 거쳤다. 그가 거친 각료자리는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못된다. 蔵相 外相 通産相 같은 굵직한 자리에는 앉아보지도 못했다.

사실 「스즈키」씨가 日本首相으로 부각된것은 그의 뛰어난 領導力

때문이 아니라 自民党内 한다하는 実力者들의 派閥싸움틈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한 것이다. 「나카소네」(中曾根康弘), 「고모토」(河本敏夫), 「미야자와」(宮沢喜一) 세사람이 경쟁을 벌이다 승부가 나지않게 되자 「미야자와」대신 「스즈키」가 들어가 首相으로 일어난 것이다.

自民당이 「스즈키」를 首相으로 밀게된것도 오늘 日本을 지배하고 있는 政治思潮를 잘 반영하고 있다. 強力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떤 不安한 變革을 초래할 積極的인 人物 보다는 「스즈키」와 같이 調整정도로 그칠 安全한 人物을 바라고 있음을 의미했다. 保守主義속에서도 穩健路線을 회구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러한 「스즈키」의 穩健保守 노선은 그의 內閣구성에서도 잘 나타났다. 官房長官에는 「미야자와」前外相, 外相에는 「오히라」內閣 때 관방장관으로 首相서거후 임시 수상서리였던 「이토」(伊東正泰) 通產相에 「다나카」(田中六助) 전관방장관등 주요포스트에 「오히라」派의 충진을 대거 기용했다. 그리고 大藏相에는 「나카소네」派의 「와다나베」(渡辺美智雄) 前農水產相이, 法務相에는 無派閥의 「오쿠노」(奥野誠亮) 前文部相이 등용됐으며 首相후보 경쟁에 나섰던 「나카소네」(中曾根康弘)는 행정관리청장관, 「고모토」(河本敏夫)는 經濟企劃庁長官에 입각하였다.

「스즈키」內閣의 이같은 人的構成은 旧世代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큰 革新 보다는 安定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日本의 歷代首相은 각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왔다.

「이케다」(池田勇人)의 所得増進, 「사토」(佐藤栄作)의 「관용과 인내」 「다나카」(田中角栄)의 「日本列島改造」, 「미키」(三木武夫)의 「클린 미키」, 「후쿠다」(福田起夫)의 「일하는 내각」, 「오히라」(大平正芳)의 「信頼와 合意」이다. 그러나 「스즈키」 「和의 政治」를 내걸었다. 和의 요체는 均衡이며 均衡은 對話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보다도 더 정확한 뜻은 穩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스즈키」內閣의 특성은 穩健保守路線으로 보아 틀림없다.

그리고 「스즈키」首相의 그같은 노선은 그가 次期 自民党총재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므로써 長期化될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스즈키」首相은 80년 10월 18일 공고되어 낮 12시에 마감된 自民党 총재선거 후보등록에 단독으로 등록하므로써 27일 소집되는 臨時 全党大会에서 任期 2년의 自民党총재에 선출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스즈키」와의 유력한 首相 경쟁자였으며 党的 總裁선출에서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나카소네」행정관리청장관과 「고모토」經濟企劃厅长官은 党的 단결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党집행부가 전원일치로 「스즈키」首相을 총재로 추대했다. 이로써 「스즈키」首相은 실질적으로 党内기반을 확립한 셈이다.

2. 「스즈키」의 對韓政策

「스즈키」內閣의 對韓政策은 穩健保守路線이 시사하는 바와같이 韓國政府의 保守政策과 크게 충돌할 理念的 근거가 없다. 韓國政府가 北韓共産主義를 철저히 韓半島에서 봉쇄하고 있다는데서 日本政府의 對革新勢力 봉쇄정책과 일치하고 있으며 韓國에 進出한 日本企業들의 安全을 도모한다는데서 韓國政府의 強力한 리더쉽은 日本政府의 이해관계와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日本內 進歩系 知識人 및 政治家들이 「10.26 事態」이 후 韓國의 全斗煥장군 출현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스즈키」首相은 침묵을 지켰다. 다만 金大中사건에 관해서는 日本에서 납치된 인물이므로 國際法的 문제를 안고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즈키」內閣으로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스즈키」內閣의 對韓政策은 2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韓國內政에 관한 日本 進歩系 인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해가며 韓國政府와의 유대를 지속시켜가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金大中사건을 어떻게 처리해갈 것이냐는 문제이다.

적어도 韓國의 政治形態에 관한 별 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물론 韓國의 政治機能이 日本의 自由民主主義와 달리 하고 있어 日本 進歩系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自由民主에 기반을 둔 政策的 弱體政府가 韓國에 들어선다고 할 때 과연 그런 政府가 北韓의 對南赤化革命 선동을 저지할 수

있으며 韓國의 政治 社会的 安定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否定的 속견을 많은 日本 인사들이 계산하고 있는듯 하다.

그렇게 韓國의 특수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日本에서 증대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대체로 保守系 인사들이라는데 한계점이 있다. 예컨대 日本의 「軍事研究」誌는 80년 10월호에서 全斗煥장군의 淨化작업을 크게 찬양하고 나선바 있다. 「오나타 카오」(小名考雄) 社長이 접필한 내용에 따르면 “現下 韓國의 淨化策과 改革조치등 일련의 움직임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위한 일시적 편법의 사고에서 나온것이 아니라”고⁴³⁾ 전제하고 日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駐韓日本大使 「스노베」(須之部 星三)도 80년 7월 日本에서의 韓國情勢報告를 통해 韓國의 民主主義는 韓國의 특수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韓國人들은 經濟的 安定을 회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時事週刊인 「週刊新潮」는 80년 8월 14일자 호에서 金大中的 체포와 기소를 둘러싸고 「아사히」(朝日) 등 일부 日本신문들이 韓國 사태에 관해 理性을 잃은듯한 태도로 편향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⁵⁰⁾

이와같이 韓國의 특수입장을 이해하려는 층은 대개 保守主義者들 아니면 韓國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로 국한되고 있다. 「軍事研究」나 「週刊新潮」가 保守主義 잡지요, 「스노베」駐韓日本大使가 韓國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는데서 그렇다. 그러나 朝日新聞, 毎日新聞, 読売新聞등 日本의 여론을 지배하고있는 영향력이

는 신문을 비롯 일반 知識層 및 進歩系 政治人들의 韓國政府에 대한 反感은 대단하다.

韓國政府에 대한 反感은 사실 日本政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있다. 日本은 여론의 힘이 크다. 따라서 行政府要人이나 國會議員을 막론하고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日本의 여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는 「다나카」 前首相이 일개 月刊잡지의 「다나카」金脈 폭로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首相職을 사임하고 말았다는데서 생생히 투영되고 있다. 「닉슨」 前美國大統領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해 쫓겨난것이나 크게 다를바가 없다.

그토록 예민하게 日本政府 지도자들이 여론에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은 日本政府의 對韓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토」外相은 취임직후 부터 1년이상이나 거르고있는 韓日定期閣僚會談에 대해 계속 회의적이라고 논평했는가 하면, 金大中 공판과 관련하여 양국관계가 크게 불편해 질수도 있다고 서슴없이 실토했던 것이다.⁵¹⁾ 「이토」外相의 이같은 담대한 발언은 反韓감정에 들뜬 日本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이토」外相이 그렇게 反韓的인 견해를 피력한바는 있지만, 親韓的인 논평을 「스즈키」首相이 공공연히 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즈키」首相은 80년 8월 18일 日本記者클럽에서 가진 會見을 통해 韓國에서 어떠한 政權이 수립되고 어떠한 人士가 지도자가 되느냐는것은 기본적으로 韓國의 國內問題라고 강조

하였던 것이다.⁵²⁾ 韓國의 國內문제에는 日本이 干渉할일이 못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써 韓日 양국관계는 韓國의 國內問題로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시사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스즈키」行政府의 對韓態度가 贊反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여론을 의식할 때 反對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고 반대로 밀바람에 흐르고 있는 「스즈키」政府의 保守性의 시각에서 볼 때 韓國의 특수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二重性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즈키」政府의 냉담한 對韓態度는 日本의 反韓여론이 고개를 숙이게될 때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日本의 反韓여론이다. 이 反韓여론은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사항을 이해하고 한국을 전반적으로 日本人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누그러질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理想主義的 進歩思想을 무색케하는 保守主義思潮가 深化되어감에 따라 弱化되리라 관측된다. 동시에 蘇聯의 南下위협이 증대되고 「이란」과 「이라크」전쟁과 같은 國際的 緊張요소가 증대될 때 日本여론은 自由 또는 人權이다 하는 理念的인 요소 보다는 實質的인 安保나 經濟實利에 기운 나머지 韓國과의 友好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리라 믿는다. 사실 요즘과 같은 國際緊張과 점증하는 日本의 保守思潮를 감안한다면 日本여론의 反韓感情은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79년도의 양국 交易實態를 놓고 본다면 日本의 對韓輸出은 66억 5천만달러 였는데

반해 對韓輸入은 33억 5천만달러에 불과했다. 日本은 對韓交易에서 2대 1로써 무려 33억달러의 黒字를 낸것이다. 日本의 여론이 차츰 차기 나라와 韓國과의 交易에서 그렇게도 日本이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될 때 韓國의 市場가치로 보아서도 그렇게 구분별하게 계속 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다만 문제는 金大中사건에 관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金大中사건은 日本領土에서 납치된데서 사건이 발단된 것이므로 國際法上 日本政府로서도 이 문제에 관해 法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金大中사건은 단순한 일반여론의 압력이라는 것을 떠나 日本政府의 國際的 權威가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계속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日本의 對韓政策 向方은 韓國의 民主化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 金大中사건의 귀추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즈키」政府의 對韓政策은 다음과 같이 要略될 수있다.

첫째, 「스즈키」政府는 日本의 反韓 여론에 밀려 韓國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日本内에서 일고있는 保守思潮와 國際的 緊張感증대 등으로 그같은 냉담한 태도는 「스즈키」政府의 노력으로 극복 될 수 있다. 특히 韓國에서 새 憲法에 따라 合憲的 大統領이 등장하게 되면 體制문제는 더욱 弱화되리라 예측된다.

둘째, 그러나 문제는 金大中사건이다. 金大中사건은 어떠한 政治思潮의 영향이라기 보다 國際法上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日本政府는

이 사건에 관해 계속 물고 늘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韓日관계의 向方은 金大中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라 할 수 있다.

3. 「스즈키」의 對北韓政策

日本の 對北韓政策은 政經分離원칙에 입각해 왔다.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日本의 對北韓 接近方式에는 變化가 없다. 「스즈키」首相은 外交의 基本方針으로 종래의 노선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⁵⁸⁾ 그러므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政策은 政經分離原則을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갑자기 北韓과의 관계를 正常化시키지도 않을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와같은 추측은 「스즈키」의 穩健保守路線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그렇고 80년 6월에 실시된 衆參議院 선거결과 나타난 反革新思潮를 감안할 때도 그렇다. 그러나 「스즈키」內閣이 既存外交方針을 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할 때 그의 對北韓政策은 先任內閣들이 추진해 온 점진적인 交流擴大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非政治的 차원에서의 經濟 및 人的 交流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日本外務省의 「우시바」(牛場信彦) 顧問은 日本外交에 있어 政經分離 外交時代는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⁴⁾ 蘇聯의 「아프간」侵攻을 비롯 東西양진영의 공공연한 軍備擴張속에 冷戰氣流가 감도는 가운데 한가롭게 政經分離를 들고나오기는 어렵다는 論理다. 日本의 安保를 위해서는 經濟的 利益쯤 제쳐놓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對北韓 政經分離는 冷戰氣流와는 다른 별

개의 地域問題라는 차원에서 다루지고 있는듯하다. 첫째, 蘇聯이 極東에서의 軍事力을 증강시켜 日本의 安全을 위협하면 할수록 日本은, 對北韓接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北韓의 東海岸은 日本의 西海岸과 마주보고 있을뿐 아니라 蘇聯의 「브라디보스토크」港口와 연결되어 있어 非常時 戰術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蘇聯을 가상의 적으로 할 때 北韓地域은 日本에 安保上 要衝으로써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日本이 政經分離 外交의 한계점을 느끼면서도 北韓에는 계속 그원칙을 적용하며 접근할 밖에 없는 근거가 아닐수 없다.

둘째, 日本의 對北韓接近은 安保上 요구되고 있는것 외에도 外交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날로 国力이 증대하며 國際的 地位가 向上되고 있는 韓國을 견제하기 위한 外交的 지렛대로 日本의 對北韓접근은 기도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은 北韓과 적당히 관계를 트면서 만약 韓國이 日本의 비위를 거스리면 北韓쪽에 붙겠다능 가능성을 南韓側에 은근히 시사하므로써 그 암시를 韓國에 대한 간접적인 外交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날이갈수록 韓日交易量은 팽창하고 있으며 日本의 對韓交易黑字폭도 늘어만 가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같이 79년의 경우 양국교역량은 66억달러대 33억달러로서 韓國측이 일방적으로 輸入超過에 몰려있다. 韓國은 이와같은 入超현상에 불만을 품고 日本이 韓國商品을 많이 사 줄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日本은 韓國측의 그러한 壓力을 상쇄시킬 經濟外交의 지렛대로 北
韓 접근을 의도적 으로라도 시도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韓國이 지나치게 日本에 대한 貿易均衡을 요구하고 나서는 日本
으로서의 새로운 市場개척의 일환으로 對北韓 交易증대를 들고나
와 韓國측에 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넷째, 순수한 의미에서 北韓과의 交易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접근도
무시못한다.

그러므로 「스즈키」內閣도 對北韓 接近을 계속 확대해 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對北韓 접근조짐은 「스즈키」內閣 出帆 이후
부터 즉각 나타났다. 80년 7월 日本의 大企業들로 구성된 「東
아시아 貿易 硏究會」가 설치된 바 있다. 「미스비시」(三菱),
「미쓰이」(三井)物産, 新日本製鐵등 日本의 鐵鋼 水産 製紙 非鐵
金屬분야의 大企業 20여개사로 구성된 이 「東아시아 貿易硏究會」
는 北韓과의 貿易 産業資源등에 관한 조사와 교역을 目的으로 하
고 있다.

결국 9월에 들어와 「東아시아 貿易硏究會」라는것은 北韓과의
직접 貿易去來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日本은 北韓과 貿
易을 함에 있어 간접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日本企業은 日本
內 北韓系 商社들에 商品을 팔고 이 상사들은 다시 北韓에 수출
하는 二重構造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東아시아 貿易硏究會」는
日中共黨書貿易과 같이 北韓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트려
기도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었다.⁵⁶⁾ 日中共黨書貿易은 62년 11월

에 準政府간 協定으로 체결되어 72년 양국의 國交가 正常化되기 전까지 公式的인 交易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말론 「東아시아貿易硏究會」의 「미나카미」(水上達三)會長은 현 단계에서 北韓과의 貿易을 이른바 「覺醒貿易」으로 격상시킬것을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시치미를 떼기는 하였다.⁵⁷⁾ 그러면서도 「미나카미」會長은 北韓이 日本에 지고있는 8백억여엔의 貿易債務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北韓의 地下資源 및 農水産物등 輸出商品 開發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⁵⁸⁾ 천명한점을 보아 日本業界의 北韓進出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짐작키 어렵지 않다.

한편 「스즈키」內閣은 日·北韓간의 人士交流범위를 종래의 非公職者선에서 일보 전진하여 公職者 交流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마도 美國의 「카터」행정부가 「솔라즈」下院議員의 北韓訪問을 허락한데 자극을 받아 「스즈키」행정부도 美國에 뒤질세라고 政治人의 교류를 내다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즈키」首相과 「이토」外相은 「솔라즈」의원 의 訪北이 있기전만해도 政治的 人物의 교류는 韓日關係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는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수차례 걸쳐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80년 10월에 들어와서 日本外務省 소식통은 日本이 北韓과의 議員교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前外相 「키무라」(木村俊夫)가 會長으로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問題硏究會」가 초청할 北韓로동당 國際部 副部長이며 對外文化 連絡협회 부위원장

인 玄峻極의 訪日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⁵⁹⁾ 뿐만 아니라 日本政府는 朝總聯의장인 韓德銖의 北韓 일시방문에 따른 日本에의 再入國을 허가하기로 10월 17일 정식 결정했다.⁶⁰⁾ 그동안 日本政府는 韓德銖의 北韓왕래를 韓國측의 반발을 고려한 나머지 北韓의 왕래를 비밀리에 처리했으나 이번처럼 그의 再入國을 공공연하게 돌추기는 처음이다. 「스즈키」內閣이 北韓에 적극 파고들려는 조적이 아닌가 한다.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接近活性化는 韓國을 견제하기 위한 外交的포석, 北韓市場을 개발하기 위한 利潤動機, 「카터」행정부의 對北韓 接近活性化에 대한 반사적인 対応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스즈키」首相이 그의 外交를 先代의것을 답습하는데 主眼點을 두고있다고 밝혔으며 그 자신이 성격상으로 急變을 도모하지 않으리라는 점, 현재 日本에서는 對共警覺心을 높여주는 保守思潮가 일고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보아 「스즈키」內閣의 北韓접근에는 한계점이 있으리라 관측된다. 더욱이 33억달러의 貿易赤字를 내고있는 韓國의 반발도 경시할 수 없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그 한계점이란 日本이 北韓과의 貿易을 62년도의 日中共覺書무역 형태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한계 그것이다. 순수한 利潤動機에서 만 보아도 日本은 中共市場과 台灣市場 둘을 놓고 비교할 때 이들중 어느것을 택 하겠느냐하면 당연히 中共을 선택할것이 분명했다. 中共과 台灣은 비교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과 北韓을

중고 어느쪽을 선택하겠느냐고 할때 日本은 經濟的 利潤에서 고려한다해도 韓國쪽으로 기울것만은 분명하다. 日本이 韓國을 그렇게 경시할 수 없다고 할 때 日本은 그들의 北韓接近을 반대하는 韓國의 요구를 외면할 수 만은 없다. 韓國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한 日本의 對北韓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經濟的으로 日北韓交易은 당분간 日中共黨露貿易식으로 발전키 어렵다는 결론이다.

마찬가지로 政治的 접근에 있어서도 한계는 있다. 「솔라즈」의 원의 北韓訪問에 자극을 받아 日本이 최근에는 政治人的 日北韓交流 운운하고 있으나 그것도 크게 진척되기 어렵다. 특히 「솔라즈」의 北韓訪問이 公職者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서 취해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스즈키」內閣도 公職者 아닌 非公職 내지는 개인자격으로 北韓 여행을 계속 국한할 밖에 없다. 다만 美國이 對北韓 관계를 急遂시킨다면 「스즈키」內閣도 美國에 뒤질세라 과감한 접근책을 강구하며, 日本內的 親北韓세력이 得勢하게 되어도 그럴것이고 韓國과의 관계가 惡化된다해도 北韓쪽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추측된다. 그밖에 다른 요건들이 지금과 같이 존속한다면 급격한 對北韓접근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래 그러했던 것처럼 「스즈키」內閣도 점진적으로 對北韓 접근을 활성화하는데 그칠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接近은 다음과같이 展望할 수 있다.

첫째, 韓國을 견제하기 위한 外交的 지렛대, 商品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인한 市場접근의 필요성, 美國의 對北韓 접근활성화에 뒤지고 싶지않은 日本의 경쟁적 편승심리등으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接近은 앞으로 活性化하리라 보인다. 둘째, 韓國의 반대, 「스즈키」의 穩健路線, 日本內에서 일고 있는 保守思潮등으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접근은 韓國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정도로 急進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다만 韓日관계가 變化된다든지 美·北韓관계가 크게 好轉되어 日本內 親北韓勢力이 得勢하게 된다면 日·北韓관계는 韓國의 입장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스즈키」가 집권하는한 발생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들번이나 도전적인 도발 보다는 「和의 政治」를 강조하는 「스즈키」의 政治哲學 및 個性으로 보아 그렇다.

第四部 對 應 策

1. 「카터」의 對韓軍事政策

가. 問題提起

「카터」대통령은 再選 될 경우 國際情勢가 지금보다 惡化 되지 않는한 나머지 駐韓美地上軍에 대한 점진적 철수를 도모한다. 한편으로는 空軍을 증강하고 對韓軍事販賣를 확대한다. 다만 北韓이 单独 全面南侵한다면 美軍의 추가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美地上軍없는 장비지원 및 海空軍만의 지원을 기대할뿐이다.

나. 対応策一

「카터」행정부의 駐韓美地上軍 추가철수는 國際情勢 전반의 기류에 달려있으므로 韓國만의 반대로 막을 수 없다. 77年「카터」의 駐韓美地上軍 철수를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対応策은 駐韓美軍의 철수를 政府가 正 面에서 반대하느니 보다는 韓美 兩國의 言論 및 로비를 活用할 준비태세를 지금부터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駐韓美軍 철수에 대비 韓國軍의 裝備現代化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日本과의 防衛문제를 분담하는것을 깊이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2. 「카터」의 對韓人權政策

가. 問題提起 -

「카터」의 人權政策은 就任初 公開的이고 위압적이던 것에서 크게 弱化, 非公開的이고 간접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란」과 「니카라과」親美政權 붕괴의 衝激이 가라앉고 蘇聯의 「아프간」侵攻위협이 사그라지며 「이란」 「이라크」散을 비롯 世界情勢가 安定을 되찾으면 「카터」는 韓國의 民主化에 다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美國内에는 아직도 人權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다만 그런 경우도 對韓人權政策은 종래와같이 위압적이 아닌 非公開的 간접접근에 기초할 것으로 보인다.

나. 対応策 -

「카터」의 對韓人權政策이 다시활기를 띄게 된다해도 77년 취임초와는 달리 韓國政府와 충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美國内의 굳어지는 保守思潮가 人權보다 安保에 관심을 더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가서는 韓國에서 新憲法이 효력을 발생하고 憲法절차에 따른 새政治지도자가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議會内の 進歩系 의원이나 知識人들의 人權改善 요구는 지속될 것이므로 「카터」행정부 人權政策에 對한 対応을 議會内

進歩系 의원과 知識人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人權에 대한 美國의 관심이 獨立鬪爭 당시부터 뿌리 깊었
다는 점을 重視, 본질적으로 韓國 자체의 人權改善에 노력하지
않는한 美國과의 人權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근원적으로 해
결되지 않는다.

3. 「카터」의 對北韓政策

가. 問題提起 -

「카터」 행정부는 北韓의 對南好戰性을 警戒하면서도 北韓에 대한 非政治的 차원의 交流를 活性化한다. 이 결과 北韓의 國際的 地位만을 높여줄 우려를 수반하고 對北韓貿易禁輸措置마저 해제할 가능성 높다. 더욱이 中共과의 關係가 더욱 진전될 것이므로 美國은 美·中共關係에 北韓을 얹혀놓고 關係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다만 美國內에서 일고 있는 保守主義思潮가 이를 어느정도 견제할 것이다.

나. 對應策 -

北韓에 대한 美國接近의 活性化는 中蘇의 상응하는 對南韓 접근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될 때 韓國의 國際的 孤立과 北韓의 地位向上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않으나 北韓을 밖으로 끌어내 教化할 기회를 연다. 그러므로 美國의 對北韓 접근은 警戒를 촉구하면서도 그 결과를 당분간 주시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전면적으로 美國의 北韓접근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70년대 부터 蘇聯과 간접적이거나 非政治的 차원에서 접촉을 할 수 있었음을 상기할 때 美國의 北韓접근을 그렇게 否定的으로만

불 필요는 없다. 다만 美国의 对北韓 접근을 놓치지 않고 中蘇의 상응하는 对南韓 접근을 유도해내는 方案을 강구해야 하며 日本을 비롯 西方국가들이 덩달아 北韓러쉬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견제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

4. 「리건」의 對韓軍事政策

가. 問題提起 -

「리건」대통령의 強硬保守路線으로 보아 駐韓美地上軍 철수에 관한 지속적인 주둔을 굳힐 것이다. 對韓軍事裝備販売도 원활할 것이다. 그러나 「리건」도 「카터」와같이 北韓의 单独南侵이 자행된다고 할 때 勸선을 다해 저지에 힘쓰겠지만 海外介入을 반대하는 孤立主義 무드에 부닥쳐 美本土의 地上軍 投入을 단행키는 어렵다.

나. 対応策 -

駐韓美地上軍의 추가철수에 관해서는 신경을 당분간 쓰지 않아도 괜찮게 되어 있으나 非常時 美軍의 全面介入은 「카터」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점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리건」도 國際환경이 달라지면 어느 때 가서는 그것이 3년 후 또는 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美國의 孤立主義思潮에 밀려 駐韓美地上軍 철수를 들고 나올것이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책은 韓國의 군사력증가이며 日本과의 防衛力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5. 「리건」의 對韓人權政策

가. 問題提起

「리건」후보가 「카터」의 人權政策을 비판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는 韓國에 人權문제를 크게 제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아직 議會와 知識人 사이에는 人權에 관한 관심이 생생히 살아 있음을 상기할 때 人權문제는 70년대 초반의 경우와 같이 議會와 知識인들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나. 対応策

議會와 知識인의 對韓人權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韓國은 韓國의 특수상황 설득에 나서야 한다. 개별접촉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韓國 자체의 人權문제 해소를 위해 韓國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韓美 양국의 人權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6. 「리건」의 對北韓政策

가. 問題提起 -

「리건」대통령은 北韓의 好戰性을 警戒하면서도 北韓과의 關係 개선만은 조심성있게 「카터」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추구한다. 「3当局會談」같은데는 관심을 들것같지 않으며 1民族 2國家 원칙에 따라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 対応策 -

「리건」의 對共경제심만을 참고로 할 때 그의 對北韓政策은 韓國으로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保守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美國内에서 일고있는 非同盟 원칙사조에 이끌려 「리건」이 美國外交의 非同盟化 원칙에 따라 北韓정군을 필요 이상으로 活性化 하지 않도록 美國内 親北韓세력 등장에 대비해야 한다.

7. 「스즈키」의 對韓政策

가. 問題提起

「스즈키」政府는 日本의 反韓여론에 밀려 韓國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또다른 保守思潮와 國際的 緊張感증대로 그같은 냉담한 태도는 점차 완화된다. 또 韓國에서 새憲法에 따라 適法的인 政府가 出帆하게되면 여론의 反韓감정도 弱化된다. 그러나 金大中문제만은 國際法上 제기되는 성격의 것이므로 日本政府로서도 그에 관해 계속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나. 対応策

北韓의 非人間的 특성을 日本內 매스컴들에 폭로하도록 하여 北韓이 韓國에 비할 수 없으리 만치 獨裁요 非人間集團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하며 韓國의 밝은 면을 자주 日本 여론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金大中사건에 관해서는 日本이 法的으로 쉽게 풀러설것같지 않으므로 韓國政府가 金大中에게 特赦같은 것을 내려 日本政府의 權威가 日本여론에 실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方法이다.

8. 「스즈키」의 對北韓政策

가. 問題提起 -

韓國을 경제하기 위한 外交的 지렛대, 商品판로 개척의 일환으로써의 접근, 美國의 對北韓 접근활성화에 뒤지고 싶지 않은 편승심리 등으로 「스즈키」內閣의 對北韓 접근은 계속 활성화한다. 다만 「스즈키」의 개인적 穩健路線, 日本內의 保守主義思潮 등의 견제로 對北韓關係가 急變할 것 같지는 않지만, 韓日關係가 交易 및 人權問題로 惡化된다던가 美·北韓 關係가 크게 改善된다면 그에 따라 日本의 對北韓關係 또한 크게 접근한다.

나. 對應策 -

韓國이 日本의 商品市場으로써 交易上 막대한 赤字를 보고 있음(66억달러 輸入대 33억달러 輸出·79년도 기준)을 내세워 日本의 對北韓 交易 확대가 韓日양국의 互惠原則에 위반된다는 점을 日本측에 강조하고 나서야 한다. 日本이 北韓과의 交易 확대를 추진할 때 韓國은 日本商品의 수입을 보이코트 한다는 決意를 보여야 한다. 동시에 日本이 北韓에 접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中共이 韓國에 접근하도록 주선해주지 않는한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편 日本內 親韓人士들을 동원하여 日本의 對北韓 접근이 中蘇의 상대적인 對韓 접근을 수반하지 못할 때 日本

의 安全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을 홍보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日本과 北韓의 관계개선 문제는 日本과 中共의 관계개선 문제와 전혀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日本내 여론이 마치 對北韓 관계개선을 對中共 관계개선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漏洩을 불식토록 여론을 통해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脚 註

1. G.E.Mowry, Theodore Roosevelt, (New york : Hill and Wang, 1963) PP.284 - 303.
2. 新亞日報, 1980. 7.15.
3. 中央日報, 1980, 9.18.
4.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1979), P.19.
5. ibid., P. 147.
6. ibid., P. 166.
7. ibid.
8. 朝鮮日報, 1979. 7.21.
9. 서울신문, 1980. 8. 2.
10.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PP.15 - 20 ; U.S.NEWS & WORLD REPORT, 1980. 9.22. P. 27.
11. U.S. NEWS & WORLD REPORT, 1980. 9.22. P. 27.
12. ibid., P.26.
13. 東亞日報, 1980. 9.18.
14. 서울신문, 1980. 8. 6.
15. 東亞日報, 1980. 5.10.
16. 中央日報, 1979. 7.16.
17.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P. 180.
18. Pacific Stars and Stripes, 1973. 3.12.

19. 東亞日報, 1977. 3.29.
20.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P. 180 - 181
21. ibid., P. 182.
22. ibid., P. 183.
23. ibid., P. 184.
24. ibid., P. 185.
25. 東亞日報, 1979.10.27.
26. 中央日報, 1979.11. 5.
27. 東亞日報, 1979.12. 6.
28. 朝鮮日報, 1980. 6. 3.
29. 京鄉新聞, 1980. 8. 8.
30. 朝鮮日報, 1980. 8.30.
31.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P. 97 ~ 98
32. 한국일보, 1979. 5.19.
33. ibid., 1979. 7.15.
34. 東亞日報, 1979. 8. 3.
35. ibid., 1980. 9.13.
36. 朝鮮日報, 1980. 8.19.
37. 鄭鎔碩, 카터와 南北韓, P. 54.
38. 朝鮮日報, 1980. 6.22.
39. ibid.
40. 한국일보, 1980.10.16.

41. 鄭鎔碩, 美國의 對韓政策 - 1845 - 1980 (서울 · 一潮閣, 1979, 增補版), P. 192.
42. ibid.
43. 東亞日報, 1973.11. 8.
44. 鄭鎔碩, 美國의 對韓政策, PP. 192 - 195.
45. 東亞日報, 1980. 8.18.
46. ibid.
47. 朝鮮日報, 1980. 6.24.
48. ibid., 1980. 9. 5.
49. 한국일보, 1980. 7.30.
50. 서울신문, 1980. 8. 9.
51. 中央日報, 1980. 8.19.
52. 新亞日報, 1980. 8.19.
53. 日本經濟新聞, 1980. 7.18.
54. ibid., 1980. 7.23.
55. 日本經濟新聞, 1980. 8. 7.
56. 東亞日報, 1980. 9. 5.
57. ibid., 1980.10.15.
58. ibid.
59. 서울신문, 1980.10.18.
60. ibid.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 The secon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3. The third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4. The four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5. The fif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6. The six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7. The sev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8. The eigh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9. The ni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0. The t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1. The elev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2. The twelf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3. The thir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4. The four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5. The fif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6. The six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7. The seven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8. The eigh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19. The nineteen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20. The twentieth part is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